

#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2017. 2

정호열



## 머 리 말

보험은 위험의 집적과 분산, 전가를 고유의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위험의 집적과 분산은 국내시장의 일부나 전부로 혹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위험의 집적이 크면 클수록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시장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의 합리적 공조 내지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있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이루어 온 것이 바로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이다.

이 연구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관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법 상황과 주요국의 입법추세를 최근에 이르기까지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련 법제와 연방법무부의 공식견해, 유럽연합의 1991년, 2003년, 2010년 규칙 전문, 일본의 관련 법조문과 하위규정의 전부를 부록에 담아 향후의 입법을 위한 충실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무릇 금융업 분야의 제도 개선에서는 국내외 시장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정책목표와 수단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일이 긴요하다. 보험시장과 경쟁정책에 관해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이 연구가 관련 제도 개선에 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 목차

---

### 요약 / 1

### 제1부 본 보고서 / 9

#### I. 연구의 목적 / 9

#### II. 규범적 기초와 현황 / 10

##### 1. 규범적 기초 / 10

##### 2.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 12

##### 3. 상호협정 현황 / 15

#### III. 보험업법의 규제 / 18

##### 1. 제도의 변천 / 18

##### 2. 현행법의 규제내용 / 20

##### 3.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 / 23

#### IV. 현행 협정의 경쟁제한성과 관련 법률리스크 / 24

##### 1. 현행 상호협정의 경쟁제한적 요소 / 24

##### 2. 협정에 따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사례 / 25

##### 3. 법 개정의 필요성 / 26

#### V. 입법론 / 28

##### 1. 기본 갈래 / 28

##### 2. 상호협정의 대상 / 29

##### 3. 상호협정의 요건 / 30

##### 4. 금융위 인가와 공정위 사전협의의 관련 / 31

### 제2부 기초연구 / 32

#### I.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면제 / 32

##### 1. 적용면제의 유형 / 32

##### 2.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일괄 적용제외 / 33

##### 3. 보험업법 제125조의 경쟁법적 의미 / 36

#### II. 주요국의 관련 법제 / 42

##### 1. 개관 및 전체 요약 / 42

##### 2. 미국 / 44

3. 유럽연합 / 52

4. 일본 / 63

| 참고문헌 | / 68

| 제3부 부록 | / 70

I. 맥캐런-퍼거슨법 관련 미국 법무부 보고서 / 70

II. 유럽연합 보험분야 적용제외 규칙 / 76

III. 일본 보험업법 관련 조항 / 103

## **A Legislative Study on Antitrust Exemption of Insurers Agreement**

According to Art. 125 of Insurance Business Act, insurers may agree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provided that they are approved prior by financial authority after a due consultation with Fair Trade Commission. The nature of this provision is basically a sector specific regulation over concerted activities of insurers, but it has been regarded a form of statutory antitrust exemption over insurer's collusion that pertain restraints of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

Substantive text of this article is archaic and not changed since its enactment in 1962. On the object of agreement, it simply provides 'their business activities' without any detailed statutory requirements. Herein, there have been increasing opinions that claim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vague wording of Art. 125. Unlike major jurisdictions of the world that permit per se exemption by virtue of statutory provision, the requirements for statutory exemption provided in Art. 58 of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 are unique. In a series of decisions concerned these requirements, Supreme Court has been strongly restrictive in allowing Art. 58 exemption.

Local insurance industries, both general and life, still adopts substantial numbers of agreements with possible anti-competitive effects. In retrospect of 2006 Supreme Court decision on general insurers agreement, it may not be quite certain whether these agreements are exempted from antitrust enforcement or not.

Along with survey of antitrust exemption for insurers in United States(McCarran-Ferguson Act), European Union(2010, 2003, 1991 IBER Regulations), Japan and Germany, this study recommends an overall revision of Art. 125 of Insurance Business Act. Points of revision are as follow. Firstly, object of agreement must be exact and definite including the cause of 'business activities

around pooling, spreading and transferring of risks'. Secondly, requirements of the agreement are to be established in the statute's wording; that the agreement in question must be neither discriminatory nor exclusive, that the agreement must allow free entry and exit, and that the agreement must not be encroaching on consumer welfare. Lastly, regulatory schemes such as approval of financial authority and prior consultation with FTC are not seen in statutory exemptions of major jurisdictions, and of course are not in harmony with deregulatory causes.



## 요 약

###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약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호협정의 대상이 나 요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 개정이 단 차례도 없었다. 그 사이 금융업이나 에너지 산업 그리고 통신방송업 등 규제산업 분야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집행대상으로 바뀌었고, 경쟁법의 내용이 국제적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보험업법 제125조는 지나치게 낡은 데다가 그 대상이 너무나 막연하여 여러가지 법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보험업계가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행한 긴급 서비스 출동중지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제외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당공동행위로서 판단하여, 보험업계의 협정 운영실무 또한 종래의 상태를 만연히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보험업은 그 자체가 국제성 혹은涉外성을 지닐 수 있고, 주요국의 경쟁법은 세계적으로 그 내용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역외적용의 법리가 보편화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자국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면제의 특례를 대폭 축소하였고, 독일 보험감독법은 관련 제도 자체를 폐기하였으며, 유럽연합도 오랫동안 유지하던 보험업에 대한 일괄 적용제외에 관한 규칙을 2017년 3월 31일부로 실효시키는 방침을 확정하고 있다. 미국은 1946년의 맥캐런-퍼거슨법의 제정을 통해 보험업에 대한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으나, 이 적용제외를 위해서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우리 보험업법 제125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 2. 상호협정의 현황과 경쟁제한성

### 가. 현황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이래 상호협정은 사실상 방임되어 있었고 그 결과 국내 보험시장에는 많은 협정이 운용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1995년이다. OECD 가입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각종 경쟁제한적 법령과 관행의 폐지를 권고 받았고, 이 때 보험시장의 많은 상호협정이 폐지되었다.

이후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계속 정비되어 왔다. 현재 생명보험 분야에는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과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등 두 건이 있다. 손해보험 분야에는 7건의 협정, 즉,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공동인수보험계약 대차청산 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청산 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등이 존재한다.

### 나. 경쟁제한적 요소

첫째,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내자(Insider)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진다. 즉 보험업법이 당해 행태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상호협정을 통해 당사회사로 하여금 보험판매 관련 이익제공, 외상보험계약의 체결, 모집종사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제공, 다른 회사 보험계약의 인수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경쟁제한 내지 거래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특히 보험업법 소정의 금지행위의 목록을 협정을 통해 늘리거나 금지의 정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면, 금융위의 인가를 얻은 적법한 상호협정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2006년 11월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적용면제의 여부와 관련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은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속성을 지닌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대해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시장을 배타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복사와 모방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상품 출시와 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 속성을 지닌다.

셋째, 불량위험 혹은 수익성이 낮은 위험의 공동인수와 관련된 협정 또한 공동인수자 사이의 요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관련 동조행위의 속성을 가지거나 시장분할적 요소를 내포한다면 카르텔금지의 대상이 되고, 특히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생보협회나 손보협회가 소속 회사로 하여금 인수에 참여토록 강제하거나 보험료 관련 조율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현행 협정들은 물론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사실상 주도하여 운용하는 것이다. 이들 보험협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소정의 사업자단체로서 동조의 수범자가 되면서, 동시에 협정의 체결과 운용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제재를 수반하는 동법 제1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

### 3. 주요국의 입법동향

주요 법제는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여 왔으나, 그 사유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보험업에 대한 적용제외 규칙을 2017년 3월 31일부로 실효시키는 방침을 확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25조가 '보험회사의 업무'로 만연하게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뚜렷한 판례법의 형성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의 법제는 위험의 집적, 분산과 전가(Pooling, Spreading and Transfer of Risks)라고 하는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협정이나 합의에 국한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해 왔다. 미국에서는 1946년 맥캐런-퍼거슨법 소정의 특례 자체가 적용면

제를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즉 당해 합의가 위험의 집적과 분산이라는 특성을 가져야 하고, 주의 보험감독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당해 행위가 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견련되고, 협정당사자가 보험권역 내의 법 주체여야 한다.

미국이 보험업에 대한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비하여,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사뭇 다르다. 즉 1995년 개정 일본 보험업법 제101조 이하에 따른 적용제외는 당해 협정 내지 합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것일 때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여(동법 제101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동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제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유럽연합 2010년 적용제외 규칙도 또한 보험사고나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한 협정이나 공동보험에 관한 합의를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제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협정이나 합의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괄 적용제외는 보험업계를 위해 사실상 실익이 없었고, 바로 여기에서 2010년 규칙이 2017년 3월 31일부로 실효되는 배경이 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각국 보험시장은 자국 경쟁법과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독일 보험감독법이나 경쟁제한금지법에는 보험분야에 대한 카르텔법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 4. 보험업법 제125조의 경쟁정책적 의미

### 가. 적용면제의 범위

보험업법 제125조는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하여 제정법상의 적용면제에 속한다. 그러나 동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처럼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유보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소위 묵시적 적용면제 혹은 해석에 의한 적용면제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을 면제할 뿐 단독행위나 기업결합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다른 법리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는 국내외적으로 없다. 그러므로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 체결행위나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협정준수행위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 나. 제정법상의 적용면제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건련

공정거래법 이 외의 다른 법률에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를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제외의 특례를 허용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를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 받아들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법률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적용제외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과 내용적으로 충돌되는 조항을 둘 경우,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리를 거쳐 적용면제가 허용되는 구조로 된다. 이 점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특색이다.

#### 다. 적용제외 여부는 개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판단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한해 적용제외를 허용한다. 이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그 다른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적용제외의 취지가 살아난다. 또한 정당화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즉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특수한 사업, 즉 전형적인 규제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유경쟁에 예외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을 원용하여 이루어진 손해보험회사들의 긴급서비스 제공중단과 관련하여 이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를 부인하고 동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로서 금지의 대상이라고 보았다(대판 2006. 11. 23. 2004두8323). 여기에서 보험업법 제125조의 소정의 ‘업무’에 대해 이를 만연하게 보험회사의 모든 업무로 풀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운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에 배치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를 보험업 고유의 속성인 위험의 집적, 분산과 관련한 업무로 제한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있어 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의 심사하는 실무도 보험업 고유의 속성을 전제로 할 때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 5. 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 가. 기본 방향

독일이나 유럽연합처럼 상호협정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이 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국내외 경쟁법 커뮤니티는 이 안을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상호협정이 운용되고 있는 보험시장의 실정에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시장안정을 교란하고 거래비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제도 개선론을 살펴 보면 실질적 적용면제 모델과 형식적 적용제외 모델의 두가지가 있다. 보험실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단 실질적 적용제외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형식적 모델에 따를 경우 부분적으로 경쟁제한적 속성을 가지거나 공정거래저해성을 가진 상호협정 또는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집행면제의 전제로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결과적으로 협정체제의 법적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남는다.

## 나. 상호협정의 대상

첫째는 맥캐런-퍼거슨법의 예에 따라서 보험 고유의 기능, 즉 위험의 집적과 전가에 관한 업무로 협정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안은 현재 보험시장에서 영위되는 상당수의 상호협정, 즉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정, 신상품개발 이익 협정, 재보험 대차 청산에 관한 협정 등 다수의 상호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남기게 된다. 예컨대 민영보험회사에 대하여 불량위험 인수를 사실상 강제하는 현재의 상호협정이 대안없이 폐지된다면, 전 국민이 무보험 불량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귀착할 것이다.

둘째는 협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 예컨대, ‘위험의 집적과 전가에 관한 공동의 조사와 연구, 거대위험이나 불량위험의 공동인수, 판매 및 경쟁질서 안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모법인 법률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보험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경쟁제한성을 최소화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연성규범의 계발이나 거래의 안정성 등 보험시장 성숙도가 낮고 보험 관련 분쟁의 빈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제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미래지향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개선 작업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다. 상호협정의 요건

협정의 요건을 개발하여 이를 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행령이 들고 있는 공정경쟁저해성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위법성 판단징표인 경쟁제한성 내지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 준별하여 운용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협정의 내용이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배제적이지 아니할 것’, ‘협정가입을 강제하거나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으로 나누어 이를 법률에서 항을 달리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이들 요건은 정당성 관련 사후적 사법심사의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인가제를 존치한다면 인가처분의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라. 금융위 인가와 공정위 사전협의 관련

맥캐런-퍼거슨 특례나 유럽연합 일괄 적용제외에 관한 규칙은 금융당국의 사전인가나 사후신고를 알지 못한다. 상호협정이 해당 법률이나 규칙상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사후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따름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상호협정에 대한 사전인가와 공정위의 사전협의는 규제완화의 시대적 추세나 분야별 규제와 일반 경쟁정책의 준별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금융당국이 인가한 상호협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정당성평가를 한다는 것도 법 감정상 부담스럽다.

한편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은 금융당국이 협약의 체결 및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동행위를 통제하여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협정체제를 마련하도록 또는 이에 가담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실제 여부를 떠나 관치금융의 잔재처럼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당국이 협정체결을 명하는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부드러운 유도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 제1부 본 보고서

---

## I. 연구의 목적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협정 체결행위 그리고 협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동조행위(Concerted acts or Collusive acts)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 상황과 문제점을 동법 제58조의 법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분야에서 시행되는 상호협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리스크를 분석한다. 손보업계가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행한 긴급 서비스 출동중지에 대해 2006년 11월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집행제외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당공동행위로서 제재하여, 보험업계는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리스크가 구체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보험업법 제정 당시의 사후신고제를 1977년 사전인가제로 바꾼 이래,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호협정 관련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었다. 물론 상호협정의 대상이나 요건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도 없었다.<sup>1)</sup> 그 사이 금융업이나 에너지산업 그리고 통신방송업 등 전형적인 규제 산업 분야 또한 공정거래법의 일반적 집행대상으로 바뀌었고, 경쟁법 역외적용의 법리가 범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다. 또한 일본은 1995년 자국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면제의 특례를 대폭 축소하였고, 독일 보험감독법은 관련 제도 자체를 폐기하였으며, 유럽연합도 오랫동안 유지하던 보험업에 대한 일괄 적용제외에 관한 규칙을 2017년 3월 31일부로 최종적으로 실효시키는 방침을 확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에 대한 입법정책을 개선하는

---

1) 정호열(2008),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보험연구원, pp. 74-80.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가받은 상호협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동조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 등 이미 적잖은 불확실성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앞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일이다. 보험산업의 법적 환경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정비하는 것은 내국 보험시장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험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 Ⅱ. 규범적 기초와 현황

### 1. 규범적 기초

#### 가. 보험업법 관련 조항

#####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시행령 관련 조항

###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가. 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다.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라. 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

마. 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바.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 2. 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나. 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다. 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

#### 3. 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나. 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

다. 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법 제12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 24]

#### 다. 시행규칙 관련 조항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 2.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 가. 순기능

보험은 위험을 관리하는 사적 시스템이다. 그러나 위험의 예측과 평가에는 정보의 부족 및 기타 기술적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고, 보험시장 내의 격렬한 경쟁이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는 일도 없지 않다. 상호협정은 단기적 과당경쟁의 폐해를 진정시키고 위험의 집적과 분산(Pooling & Transfer of risks)이라는 기능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특히 보험프랙티스가 충분히

성숙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나 그 보조자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통제하는 연성규범이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각종 상호협정은 보험시장의 미숙한 여건과 실재를 적절히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나아가서 보험협회에 의한 상호협정제도의 운용은 일종의 자율규제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의한 규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고, 타율적인 규제와 감독을 시장의 내적질서로 체화시키는 기능을 보일 수도 있다.

상호협정을 통한 공조의 필요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sup>2)</sup>

첫째, 개별 보험자가 인수하기 버겁거나 인수를 꺼리는 불량위험을 보험회사들이 공평하게 인수하기 위한 협정들이 있다.<sup>3)</sup> 지진과 해일, 화산의 분출, 원자력사고나 방사능누출 등으로 인한 거대위험은 단일한 보험자가 인수하기가 버겁고, 경제성이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겨서는 인수되기 어려운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손해율이 높거나 기타 사유로 개별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는 위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사고율이 높아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자들이 상호협정을 체결한 후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인수하거나 혹은 안분비례의 방식으로 나란히 고위험 물건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불량위험을 업계 전체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설계사나 대리점 등 판매채널들이 보다 좋은 거래조건을 찾아 떠돌거나 각종 불건전한 경쟁수단을 남용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서 보험모집질서를 안정시키고 모집경쟁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협정이 오랫동안 운용되어 왔다.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과 손해보험시장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등이 그것이다. 이들 협정에 존재하던 경쟁제한적 요소들은 상당부분 순화되었고, 보험업법과 하위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사업자단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의미가 있다.

2) 정호열(2011), 「보험회사간 상호협정에 관한 법적규제와 그 문제점」, 『성균관법학』, 23권 제3호, pp. 727~729. 한편 보험사업의 특수성을 상호협정의 근거로 보면서 보험시장에 대한 경쟁법의 집행을 이중규제로 보는 견해로는, 이성남·김건(2003),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pp. 338~339.

3) 성대규(2012), 『한국보험업법』 개정판, 두남, 2012, pp. 550~554.

셋째, 독창적인 보험상품의 개발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허법적 의미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신규성, 유용성, 적법성 등의 요건을 구비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의 모방이나 유사상품의 개발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하여 시장의 선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는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시장에도 도입되어 있다.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상호협정(2001. 12. 14 금감위 인가)과 동시행세척이 그 예이다.

넷째,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여 광의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기 위한 상호협정도 있다. 예컨대,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청산 협정이나 보험상담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협정,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기구에 관한 협정 등이 그러하다.

## 나. 역기능

첫째, 경쟁제한에 따른 시장기능 훼손의 우려이다. 상호협정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면, 담합을 통한 가격고정 기타 남용적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시장과 가격기능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중장기적 후생은 물론 단기적 후생도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둘째, 상호협정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들은 이 제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국외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는 위험의 예측과 그에 따른 손해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바, 상호협정은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사업자들의 각종 집단적인 남용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셋째, 보험은 전통적인 규제산업의 한 갈래이지만 시장기능의 창달은 소비자후생의 증대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규제당국도 분야별 산업정책의 관점을 넘어 국민경제 전체의 흐름에 부응하여야 하므로, 보험업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적인 분야별 규제는 축소하고 분야별 규제를 일반적 경쟁정책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 상호협정 현황

#### 가. 개관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이래 상호협정은 사실상 방임되어 있었고 그 결과 국내 보험시장에는 많은 상호협정이 운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큰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1995년이다. OECD 가입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각종 경쟁제한적 법령과 관행의 폐지를 권고받았고, 이 때 보험시장 내 존재하던 많은 상호협정이 폐지되었다.

2012년 10월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에서 시행되던 상호협정은 12건이었다. 즉, 1)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2)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3)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4)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청산 협정, 5)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 6) 원자력보험 공동인수 협정, 7) 보험사고 공동처리에 관한 협정, 8) 해외보험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 9)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청산 협정, 10) 보험상당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11)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12)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기구에 관한 협정 등이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보험시장 내 상호협정도 계속 정비되어 왔다. 잔존 협정을 개관하면, 개별 보험회사가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 위험이나 불량위험을 공평하게 인수하는 것, 독창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 보험모집질서의 안정을 위한 것, 기타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 등이다.

#### 나. 현황(2017. 1. 31 기준)

생명보험 분야에는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2016. 4 개정)<sup>4)</sup>과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2015.12 개정)<sup>5)</sup> 등 두 건이 있다. 손해보

4)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처리지침(2016. 4 개정)'을 제정하여 운용함.

5)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시행세칙(2015. 12 개정)'을 제정하여 운용함.

험 분야에는 7건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즉,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sup>6)</sup>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청산 협정,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청산 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등이다.

위에서 열거한 협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독창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일정한 기간 부여함으로써 신상품에 대한 개발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신규성, 유용성 등을 갖춘 보험상품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sup>7)</sup> 생명보험분야는 물론 다른 금융분야에도 이 제도가 존재한다.

-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보험모집 관련 불건전한 행위를 통제하여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지사항으로는 특별이익 제공, 외상보험, 보험계약 경유처리, 허위사실 유포,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무자격자 모집위탁,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초과보험 등이 있다. 금지위반에 따른 제재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위 금지의 세부내용을 세부적용기준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생보업계에도 이에 준하는 협정이 있다.

-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청산 협정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협정으로,

6)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함.

7) 배타적 사용기간은 신상품 심의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개월 또는 3개월이며, 다른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하면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가 제재를 청구할 수 있음.



공동보험자 사이에서 각종보험료의 대차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공동인수보험의 각 보험사 상호정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

500톤 미만의 무선급(無船級) 소형선박 등의 공동인수를 위한 협정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인수되기 어려운 저수익성 보험을 공동으로 인수케 하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가 대신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를 각사에 배분한다.

-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청산 협정

재보험 및 재재보험의 대차청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협정이다. 당해 보험거래의 기술적 필요에 대응하고 결제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자동차보험의 불량위험을 공동인수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익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자동차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이다. 불량물건의 경우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므로 공동인수를 사실상 강제하는 기능이 있다.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기구에 관한 협정

자동차사고 관련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련하여 보험회사 사이에 보상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또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협정이다.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각 보험사의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이므로, 사전적 분쟁심의기구를 통해 각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일종의 자율적 분쟁해결장치를 도입한 것이다.

### Ⅲ. 보험업법의 규제

#### 1. 제도의 변천

##### 가. 1962년 제정 보험업법: 사후신고제

5.16 정부는 집권 초기 법령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보험업법 또한 1962년에 제정되었다. 제정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자가 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다만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사후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사후신고제는 카르텔이나 독점 관련 문제의식이 부존재하였던 시절의 입법으로서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을 사실상 방임하는 것이다.

##### 1962년법의 관련 규정

제14조 (상호협정) ① 보험회사가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협정이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의 변경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재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동항의 협정의 가맹회사나 비가맹회사에 대하여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나. 1977년 보험업법: 사전인가제

1977. 12. 31 법률 제3043호로 개정된 보험업법 제17조는 상호협정에 대해 재무부장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방만한 사후신고제에 갈음하여 사전신고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 1977년법 관련 규정

제17조 (상호협정) ① 보험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 협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무부장관은 공익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협정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 다. 1997년 보험업법: 경쟁당국의 사전협의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독점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1980년이었고, 이후 담합이나 독점력남용 혹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1997년 보험업법 개정 시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 1997년법 관련 규정

제17조 (상호협정) ① 보험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 협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8. 28〉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공익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8〉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라. 2003년 보험업법 체제개편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시 상호협정에 대한 실체적 내용의 변화는 없었고, 다만 종전에 통칙에 두던 규정을 보험업법 제125조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 인가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가의 대상이나 요건에 관해서는 정하는 바가 없다.

## 2. 현행법의 규제내용

### 가. 현행법 법문

####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①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협정의 주체

미국의 맥캐런-퍼거슨법은 적용면제의 대상인 협정이나 계약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은 상호협정의 주체에

대해 보험회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보험협회 등의 사업자단체, 보험의, 보험 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은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모집질서 관련 협정의 경우에도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당사자가 아니라 이들과 위임 또는 촉탁관계를 가진 보험회사에 대하여 행위제한 혹은 위반 시의 제재 등을 정하는 것이고, 대리점이나 설계사 혹은 보험의 등에 대해서는 상호협정이 직접적인 구속을 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외국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사실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협정의 객체

보험업법과 하위규정은 상호협정의 대상 혹은 객체와 관련하여 “업무에 관한 공동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건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학설을 살펴보면, 보험학 전공자들은 보험업법의 법문 그대로를 따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업무 전반으로 풀이하는 경향을 보인다.<sup>8)</sup> 그러나 경쟁법학에서는 사뭇 다르다. 즉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의 취지가 보험업 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카르텔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므로 위험의 분산과 전가 등 보험 고유의 속성과 무관한 보험회사의 업무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sup>9)</sup>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와 내용을 정면으로 논란한 것은 아니나,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소정의 정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업계에서 체결된 상호협정의 효력을 다룬 판결례가 있다. 즉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8) 성대규, 앞의 책, pp. 550~554; 이성남·김진, 앞의 책, p. 339.

9) 신동권(2015), 『독점규제법』 제2판, pp. 1125~1126; 이황(2008),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06. 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18권, pp. 360~362; 이봉의(2008), 「보험업과 카르텔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8권, pp. 274~275.

은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에 관한 협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 라. 금융위의 사전 인가 및 명령권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들이 상호협정을 체결·변경·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협정 인가에 앞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이 인가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재량행위에 속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인가의 요건으로서,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요건은 모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는 없으나, 규제당국 특유의 인가요건으로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쟁법에서 구사하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나 공정거래저해성 등의 개념과는 달리, 분야별 규제의 관점에서 부당한 영업관행을 금지하고 구체적 보험소비자에 대한 개별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감독행정의 실제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공정경쟁저해성을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성과 준별하고 이를 규제법 특유의 요건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보험업법상의 상호협정 제도는 그 경쟁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고 공정거래법의 집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본령이라고 할 때,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인가요건으로서 공정경쟁저해성을 두는 것은 정책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조항은 선단적 보험감독행정을 뒷받침하는 면이 있는 바, 국내 보험시장에 진입한 모든 보험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상호협정체제에 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된다. 협정체제에 대한 국외자(Outsider)의 존재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대위험이나 불량위험에 대한 부담을 모든 보험사업자가 공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협정운영으로 인한 긍정적인 외부효과에 국외자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통제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상호협정 자체가 이론상으로 또 법제상으로 논란의 대상인 것인데,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공동행위를 위한 협정체결을 강제하거나 명령한다는 것은 법정카르텔의 잔재에 해당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 3.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를 인가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기에 앞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상호협정이란 경쟁제한적 요소를 그 자체 내포하므로, 일반적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상호협정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분석과 관련된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거래분야를 통괄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상호협정이 가져오는 편익과 현재적 혹은 잠재적 경쟁제한성을 비교형량하여 당해 협정의 과도한 경쟁제한적 속성을 경감하고 보험소비자의 후생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보험업법은 공정위와의 사전 협의의 방법이나 절차, 협의의 정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는 충분한 기간을 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협의여야 할 것이고,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정위의 동의가 없는 한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을 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전협의를 경제부처 사이에 흔하고 관련된 행정실무 또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보다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협의를기간을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하는 견해도 있다.<sup>10)</sup> 즉 통상의 민원처리기간이 7일, 법령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기간이 10일임을 고려할 때 7~10일 정도의 기간을 주자는 것이다. 실무상으로 협의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실제 협의가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공정위와 금융위가 2007. 11. 28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이와 관련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sup>11)</sup>

## IV. 현행 협정의 경쟁제한성과 관련 법률리스크

### 1. 현행 상호협정의 경쟁제한적 요소

첫째,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내자(Insider)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진다. 즉 보험업법이 분야별 규제 차원에서 당해 행태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상호협정을 통해 당사회사로 하여금 보험판매 관련 이익 제공, 외상보험계약의 체결, 모집 종사자에 대한 각종 지원 제공, 다른 회사 보험계약의 인수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경쟁제한 내지 거래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특히 보험업법 소정의 금지행위의 목록을 협정을 통해 늘리거나 금지의 정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면, 금융위의 인가를 얻은 적법한 상호협정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2006년 11월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적용면제의 여부와 관련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손해보험, 생명보험 공통)은 특허법적 의미의 신규성(Novelty)은 아니지만, 독창적인 속성을 지닌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에 대해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시장을 배타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보장

10) 성대규, 앞의 책, p. 554.

11) 이황, 앞의 글, p. 398.



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복사와 모방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상품 출시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경쟁제한적 속성을 가진다.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다면, 이러한 상호협정 체결행위나 이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의 상품 출시 및 영업제한행위는 당연히 공정거래법 제19조의 금지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셋째, 불량위험 혹은 수익성이 낮은 위험의 공동인수와 관련된 협정이다. 손보업계의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또한 공동인수자 사이의 요율이나 기타 거래조건 관련 동조행위의 속성을 가지거나 시장분할적 요소를 내포한다면 카르텔금지의 대상이 되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특히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생보협회가 손보협회가 소속 회사로 하여금 인수에 참여토록 강제하거나 보험료 관련 조율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넷째, 보험거래의 기술적 사항을 단편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협정체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청산 협정,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청산 협정,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회구에 관한 협정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들 협정은 경쟁제한성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이 일괄적용 제외에 관한 규칙을 중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이러한 협정을 일반 경쟁법의 관할에 맡겨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생·손보업계에 시행되는 상호협정들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사실상 주도하여 제정, 운용하는 것이다. 이들 보험협회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소정의 사업자단체로서 동조의 수범자가 되면서, 동시에 협정의 체결 및 운용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제재를 수반하는 동법 제19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

## 2. 협정에 따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사례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두 가지 요지)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17조(현행법 제125조)가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상호협정을 허용한 취지는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 상호협정의 특별이익 제공금지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에 의거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의 합의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보험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보험업법 제17조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제58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3. 법 개정의 필요성

위의 판결은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업무’를 정면으로 논하면서 그 한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25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8항 등에 의거한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집행면제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당해 법규의 내용과 전체적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밝힌 후, 사업자들이 협정을 원용하여 제공을 중단한 긴급서비스는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 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인가받은 상호협정에 기초한 손해보험회사의 공조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집행면제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들의 공조행위는 원래의 상호협정 그 자체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상호협정과 동 시행세칙에 따라 손해보험 사장단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긴급서비스 제공중단을 합의하고 시행하였다. 협정에서 시행세칙으로 위임하고 다시 사장단회의에서 공동행위를 결의하는 방식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생·손보 공통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협정 두 건(공정경쟁질서 유지 및 신상품 개발 관련 상호협정, 생·손보 공통)도 시행세칙을 두고 있는 바, 시행세칙에 실제적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은 보험업법 제125조의 예외적 속성에 미루어 그 자체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편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업무’ 범위가 재판의 쟁점이 된다면 법원은 보험 고유의 위험의 집적과 분산, 전가(Pooling, Spreading, and Transfer of risks)에 한정할 개연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국내 학설의 추세도 제한적 해석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주요국의 법제 동향도 적용면제를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는 고도의 규제산업에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규의 근거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은 대법원이 오랜 기간 거듭 확인하고 있는 확립된 판례이다. 여기에서 상호협정의 대상 혹은 객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한하고 시행령이 정하는 인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행령이 정하는 첫 번째 인가요건 공정경쟁저해성은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른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 볼 때 법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재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모법에서 바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V. 입법론

### 1. 기본 갈래

#### 가. 현상유지론

현행 보험업법 제125조 관련 법령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인 대응책을 찾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상호협정을 재검토하여 본 협정과 시행세칙으로 나눠진 체제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경쟁제한적이거나 개별사업자를 차별 혹은 배제하거나 협정체제에 준수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정리한다.

#### 나. 제도폐지론

독일이나 유럽연합(2017년 3월 31일 부로 적용제외 규칙 일몰)처럼 상호협정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방안이다. 1999년 OECD 권고에서 보았듯이, 이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국내외 경쟁법 커뮤니티는 이 안을 선호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상호협정이 운용되고 있는 보험시장 상황에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보험시장의 안정을 교란하고 거래비용을 증폭시켜 소비자후생을 침해할 수 있다.

#### 다. 제도 개선론

제도 개선론도 다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정한 상호협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집행면제를 인정하는 미국모델(질적인 적용제외 모델: 미국 맥 캐런-퍼거슨법)이고 둘째는 일정한 상호협정에 대해 경쟁법의 적용제외를 형식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요건으로 경쟁제한성이 없을 것을 요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형식적 적용제외 모델(일본 1995년 보험업법 체제, 유럽연합 2010 규칙)’이다.

두 모델 중에서는 실질적 적용제의 모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모델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미루어 볼 때 부분적으로 경쟁제한적 속성을 가지거나 공정거래저해성을 가진 상호협정 또는 이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집행면제의 전제로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결과적으로 협정체제의 법적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남기 때문이다.

## 2. 상호협정의 대상

### 가. ‘보험 고유의 업무’안

미국 맥캐런-퍼거슨법의 예에 좇아 보험 고유의 기능, 즉 위험의 집적과 전가(Pooling and Transfer of risks)에 관한 업무로 상호협정의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경쟁정책 커뮤니티와 입법자를 설득하는데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현재 보험시장에서 영위되는 상당수의 상호협정, 즉 공정경쟁질서 유지 협정, 신상품 개발이익 협정, 재보험 대차청산에 관한 협정 등 다수의 상호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영보험회사에 대하여 불량위험 인수를 사실상 강제하는 현재의 상호협정이 대안없이 폐지된다면, 전체 국민이 무보험 불량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의 몫이 될 것이다.

### 나. 협정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

예컨대, 상호협정의 객체와 관련하여 ‘위험의 집적과 전가에 관한 공동의 조사와 연구, 거대위험이나 불량위험의 공동인수, 판매 및 경쟁질서 안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모법인 법률에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보험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경쟁제한성을 최소화하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협정의 예를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보험감독규정에 보다 구체적인 사

항을 위임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연성규범의 계발이나 거래의 안정성 등 보험시장 성숙도가 낮고 보험 관련 분쟁의 빈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또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는 입법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재보험이나 준거법조항 등 보험사업 자체가 국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논란될 수 있고, 적용제외 관련 공정거래법의 법리 자체도 국제적으로 규격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상호협정의 요건

현재 보험업법 제125조는 동조의 대상을 널리 ‘보험회사의 업무’로 규정할 뿐 그 요건에 관해서는 정하는 바가 없다. 한편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금융당국의 인가요건으로서,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상호협정의 요건을 개발하여 이를 모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행령이 들고 있는 공정경쟁저해성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위법성 판단징표인 경쟁제한성 내지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 준별하여 운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야별 규제당국이 경쟁제한성 관련 심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경쟁당국의 관할권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협정의 내용이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배제적이지 아니할 것’, ‘협정가입을 강제하거나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으로 나누어 이를 법률에서 항을 달리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요건규정은 정당성 관련 사후적 사법심사의 준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인가제를 존치한다면 인가처분의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 4. 금융위 인가와 공정위 사전협의의 관련

미국 맥캐런-퍼거슨 특례나 유럽연합 일괄 적용제외에 관한 규칙은 금융당국의 사전인가나 사후신고를 알지 못한다. 이들 법제에서는 상호협정이 해당 법률이나 규칙상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사후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따름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상호협정에 대한 사전인가와 공정위의 사전협의는 규제완화의 시대적 추세나 분야별 규제와 일반 경쟁정책의 준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sup>12)</sup>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금융당국이 인가한 상호협정에 대해 법원이 다시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정당성평가를 한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은 금융당국이 협약의 체약 및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 공동행위를 통제하여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협정체제를 마련하도록 또는 이에 가담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실제 여부를 떠나 관치금융의 대표적 잔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3)</sup> 현실적으로도 금융당국이 협정체결을 명하는 경직적인 태도가 아니라, 행정지도 중에서도 은폐된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의 프랙티스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현대적인 감독행정이 될 것이다.

12)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63조에서도 경쟁제한적 법령 제정에 대해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물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실제로 인가한 사례는 전무한 형편임. 물론 공정거래법 제63조에 따른 협의는 법령의 제개폐에 앞서 유관기관 협의절차의 실정법적 근거가 됨.

13) 정호열, 앞의 글, p. 733.

---

## 제2부 기초연구

---

### I. 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면제

#### 1. 적용면제의 유형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는 크게 두 갈래로 존재한다.

하나는 공정거래법 그 자체의 명문규정에 의하는 적용면제의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공정거래법 제12장의 적용제외 규정, 즉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괄 적용제외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태와 관련된 개별조항, 예컨대 기업결합이나 카르텔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7조나 제19조에서 당해 규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허용한 금지의 예외사유를 두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별개의 단행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혹은 공정거래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유보하거나(명시적 적용제외) 혹은 공정거래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석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묵시적 적용제외 혹은 해석에 의한 적용제외)가 있다.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하는 대표적 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8항, 제9항이 대표적이다. 즉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구매나 판매행위 등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제23조의 적용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산업, 즉 전기, 가스 등 에너지산업, 통신방송사업, 보험금융업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해당 분야에 대한 시장간섭과 규제가 강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법



혹은 영업규제법이 대거 제정되어 있다. 이들 분야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되어야 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이중규제 혹은 옥상옥의 규제라는 오래된 견해가 더러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별 규제(Sector specific regulation)가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경쟁정책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분야별 규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해당 규제당국의 영업허가나 인가가 당해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적용제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sup>14)</sup>

물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공적독점 체제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예컨대, 신서의 송달 등의 우편사업이나 우편환 업무 등은 우편법이나 우편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독점하며 정통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우편법 제2조). 우편사업 등의 공적독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지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사업독점권을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우편법 제46조). 그러나 1990년대 말 홍삼의 제조, 가공 등 종래 공적독점으로 분류되던 상당수의 사업들이 민영화되었고, 인삼사업법과 한국담배인삼공사법 등은 폐지되었다. 담배사업법은 존치되어 있으나, 담배제조업에 대한 진입제한도 완화되어 담배의 제조와 판매 분야도 시장화의 길을 가고 있다(동법 제11조).

이하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일괄 적용제외, 즉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이 보고서의 목적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검토한다.

## 2.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일괄 적용제외

### 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데, 이것이 소위

14) 정호열(2016), 『경제법』 제5판, 박영사, pp. 79~80.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다. 동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당해 행위의 위법성이 일괄적으로 조각된다.

#### 나. 정당한 행위의 두 갈래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법률 그 자체의 규정에 직접 의거한 사업자들의 행위이다. 예컨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8항, 제9항에 따라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을 위해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나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제23조의 집행이 배제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금융위의 인가를 얻은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행위와 이 협정을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이 묵시적으로 유보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행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업자들의 행위이다. 여기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이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행정관청의 개별적 행정행위 내지 구체적 행정처분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sup>15)</sup>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관청의 처분에는 처분의 대상인 사업자를 규범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고, 따라서 주무관청의 처분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는 의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법제상으로도 보험업법 제125조 제2항에서 금융위는 보험회사에 대해 상호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협정체제에 가담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정하는 바, 이 명령에 따른 상호협정 체결행위 그리고 협정을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은 적법한 것이고, 보험사업자들은 이 명령에 규범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의 경우는 사

15) 개별적 행정처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이호영(2015), 『독점규제법』 제5판, pp. 21~22.

정이 다르고, 당해 지도의 사실상의 구속력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책임이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조각될 수 있다.<sup>16)</sup>

#### 다. 정당성의 판단기준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법령에 따른 사업자의 ‘정당한’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면제한다. 여기에서 당해 행위의 정당성을 다른 법률의 전반적 취지와 특례의 내용에 따라 평가할 것인가 혹은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와<sup>17)</sup> 다른 법률, 예컨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나 보험업법 제125조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sup>18)</sup>로 나뉜다. 전자는 다른 법률에 의거한 경우라도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한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가 그것이 비록 경쟁제한적 속성을 가지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위법성 판단을 유보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취지라고 풀이하는 것이다.

경쟁제한적 행위를 가능한 한 금지하고 적용면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과 내용적으로 충돌하는 규정을 의도적으로 도입하고 또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당해 행위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제정법에 의한 적용제외를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위에 놓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는 규범적 질서에 배치된다. 물론 다른 법률이 정하는 예외의 허용범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16) 정호열(2016), 『경제법』 제5판, pp. 81~89; 서울고판 1992. 1. 29, 91구2030; 대판 2009. 7. 9, 2002두26117.

17) 권오승(2008), 『경제법』 제6판, 법문사, pp. 134~135; 이호영(2011), 『독점규제법』 제3판, 홍문사, pp. 25~26. 최근 문헌을 살펴보면, 정당성을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사라지고 있음.

18) 정호열(2016), 『경제법』 제5판, pp. 82~83; 신동권(2016), 『독점규제법』 제2판, 박영사, pp. 1124~1125.

이며, 또 이는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나,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는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 판결이 어느 견해에 따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문의 문언과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이 판결은 다른 법률에 의거한 정당성판단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3. 보험업법 제125조의 경쟁법적 의미

#### 가. 제정법상의 제외, 묵시적 적용제외

보험업법 제125조는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동조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행위 그리고 체결된 협정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특히 경쟁제한적인 카르텔을 금지하는 동법 제19조의 적용이 유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의 보험업법 유사 제도나 미국의 맥캐런-퍼거슨법 소정의 특례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차원에서 다루어 왔고, 우리나라의 학설도 보험업법 제125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정법상의 적용면제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업법 제125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처럼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유보하는 명문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소위 묵시적 적용면제 혹은 해석에 의한 적용면제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 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집행면제

적용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적용을 면제할 뿐 단독행위나 기업결합제한에 관한 공정거래법 다른 법리의 적용을 전부면제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는 국내외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 체결행위나 이에 따른 보험 회사의 협정준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적용면제가 아니라, 부당공동행위 금지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 다. 제정법상의 적용면제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견련

공정거래법 이 외의 다른 법률에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이를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적용제외의 특례를 허용한다.

서면법을 비롯한 미국의 연방 독점금지법이나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유럽연합 경쟁법(TFEU 제101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8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일본 공정거래법도 과거 존재하던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즉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실상 불필요한 조문으로서 주요국 중 이러한 입법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를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 받아들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법률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적용제외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9)</sup> 다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과 내용적으로 충돌되는 조항을 둘 경우, 이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58조 소정의 법리를 거쳐 동법 전부 혹은 일부의 적용면제가 허용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 라. 적용제외 여부는 개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판단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

19) 제정법에 의한 명시적 적용제외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58조를 원용할 필요가 없고, 다른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상충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적용배제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입론에 의한다면, 제정법상의 적용제외 중 묵시적 적용제외에 한해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적용되고 명시적 적용제외는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 공정거래법의 집행이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결과가 됨.

위'가 아니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한해 적용제외의 특례를 허용한다. 이 정당성의 판단기준을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그 다른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적용제외의 취지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정당화사유를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즉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특수한 사업, 즉 전형적인 규제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유경쟁에 예외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당화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사(修辭)이다.<sup>20)</sup>

이러한 견지에서 보험업법 제125조 소정의 상호협정을 원용하여 이루어진 손해보험회사들의 긴급서비스 제공중단과 관련하여 이들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를 부인하고 동법 제19조 소정의 부당공동행위로서 금지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이다. 이 판결은 상호협약과 동 세부적용기준에 의거하여 대한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보험업법 제125조의 소정의 '업무'에 대해 이를 만연하게 보험회사의 모든 업무로 풀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운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에 배치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를 보험업 고유의 속성인 위험의 집적, 분산과 관련한 업무로 제한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원회의 인가에 있어 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무도 보험업 고유의 속성을 전제로 할 때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20) 대판 1997. 5. 16 96누150; 대판 2005. 8. 19 2003두9251;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 등.

마. 대판 2006. 11. 23 2004두8323(발췌)

### 1)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오일 보충, 라디에이터캡 교환,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 교환, 윈도브러쉬 교환, 휴즈 교환, 팬벨트 교환, 엔진 과열 응급조치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를 포함하는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를 합한 것을 말하고, 이하 같음)는 대부분의 차종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점, 서비스 내용이 사고발생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소비자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위 서비스의 운영이 손해보험회사 재산운영의 안전성·수익성·유동성 및 공공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자동차손해보험 사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자동차손해보험에 있어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거래조건’에 해당하고, 위 서비스가 보험약관이나 사업방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이를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거래조건’, ‘특별이익 제공’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2)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부분에 대하여

법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두 9251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대한손해보험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함)와 그 구성원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1997. 11. 25 제3차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사장단회의에서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편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위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한 행위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보험감독원장은 1997. 9. 19 원고 손해보험협회에 업계자율로 보험계약자 서비스와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 구 보험업법(1998. 1. 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에 기하여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폐지하도록 명령하거나 행정지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 합의가 법 제58조에 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나아가 위 보험업법 제17조가 보험사업자에



게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상호협정을 허용한 취지는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위 상호협정의 특별이익 제공금지에 관한 세부적용기준에 의거한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 폐지의 합의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보험의 거래조건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보험업법 제17조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제58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181조, 법 제5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3)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부분에 대하여

####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 여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 11. 1 부터 2001. 3. 1 사이에, 나머지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2001. 4. 1 부터 2001. 10. 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화하여 유료화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2001년도 국내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이 97.9%에 이르는 점,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포함되는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1.1%에 이르는 점,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긴급출

동 서비스를 폐지 및 유료화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등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1개의 손해보험회사가 단독으로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의 무료제공을 폐지할 경우 영업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상품으로 유료화한 후 종전 보험계약자의 80%가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특약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이나 서비스 이용상황의 고객별 점검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손해보험회사들의 5개 주요 긴급출동 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Ⅱ. 주요국의 관련 법제

### 1. 개관 및 전체 요약

#### 가. 비교법 요약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은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경쟁법의 일반적 집행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사유나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 왔다. 최근 유럽

연합은 보험업에 대한 적용제외 규칙을 2017년 3월 31일부로 실효시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 제125조가 ‘보험회사의 업무’로 만연하게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뚜렷한 판례법의 형성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등의 주요국 법제는 위험의 집적, 분산과 전가(Pooling, Spreading and Transfer of risks)라고 하는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 즉, 위험의 공동인수와 평균화에 관한 협정이나 합의에 국한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해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1946년 맥캐런-퍼거슨법 소정의 특례 자체가 적용면제를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즉 당해 합의가 위험의 집적과 분산이라는 고유적 특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주감독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당해 행위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견련되고, 협정당사자가 보험권역 내의 법 주체여야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이 보험업에 대한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비하여, 일본이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즉 1995년 개정 일본 보험업법 제101조 이하에 따른 적용제외는 당해 협정 내지 합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것일 때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여(동법 제101조 제1항 단서), 그 결과 동조 소정의 적용면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의 집행제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쟁제한성이 없고 부당성이 없는 공동행위나 단독행위라면 당해 행태를 일반 경쟁법 또한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2010년 적용제외 규칙도 또한 보험사고나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한 협정이나 공동보험에 관한 합의를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제외의 요건을 살펴보면(동 규칙 제4조, 제6조) 이들 협정이나 합의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일괄 적용제외는 보험업계를 위해 사실상 실익이 없었고, 바로 여기에서 2010년 규칙이 2017년 3월 31일부로 일몰조항에 따라 실효되는 배경이 된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각국 보험시장은 자국 경쟁법과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이다. 유럽연합의 기축을 이루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자국의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이나 경쟁제한

금지법(GWB)에서 보험분야에 대한 카르텔법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요컨대, 보험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특히 제정법상의 특례를 축소하고 일반 경쟁법의 집행을 확대하는 것이 범세계적인 흐름이다. 독점금지법 집행이 금융 분야를 포함하여 소비자후생을 총체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인식의 확산,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이 일반화하여 보험분야의 담합이나 기업결합 그리고 독점화행위도 그 적용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분야별 규제(예컨대 보험규제)와 일반 경쟁정책의 동조화현상 등이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의 배경으로 요약할 수 있다.

## 2. 미국

독점금지법 자체가 미국에서 전 세계로 파급되었듯이, 보험업이나 농업부문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의 효시 역시 미국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적용면제 법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측면이 있고 그 동향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는 제정법에 의한 면제(Statutory exemption)와 판례법에 의한 적용면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 바, 판례법에 의한 적용면제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법한 행위(소위 국가행위이론, State action immunity)와 이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의 행위에 대한 적용면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보험업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연방 독점금지법 밖의 제정법상의 면제, 즉 맥캐런-퍼거슨법에 의한 면제이며 보험사업 관련 적용면제의 논의는 대부분 이와 관련되어 있다.<sup>21)</sup> 즉 194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험을 상거래(Commerce)의 하나로 보면서 주간에 걸친 보험거래가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선언하자 이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46년의 맥캐런-퍼거슨법(McCarran-Ferguson Act)이

21) 이하의 내용은 “정호열(2008),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보험연구원, pp. 51~67”에 주로 의지하면서 최근의 변화와 논지를 보완한 것임. 또한 이황(2008),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06. 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18권, pp. 351~356 및 이봉의(2008), 「보험업과 카르텔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8권, pp. 273~277.

다. 이후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맥캐런-퍼거슨법에 따른 특례에 대해 미국 보험업계 내의 이해가 상충하면서 이 법의 폐지론이 거듭 부상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sup>22)</sup>

한편 이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례는 물론이고 상당한 수의 대법원 판결례가 축적되어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 적용면제 법리를 형성하고 있으며,<sup>23)</sup> 경쟁제한적 속성을 지니는 적용면제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법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미국의 보험업에 대한 연방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의 법리는 입법<sup>24)</sup>이나 판례, 해석론을 통틀어 큰 변화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고,<sup>25)</sup> 이는 2017. 1. 31 기준 West Law를 상세하게 검색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여하튼 미국 제정법과 판례법의 동향은 우리나라 보험업법 제125조의 해석 혹은 입법 개선안의 전개를 위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 가. 맥캐런-퍼거슨법의 제정배경

원래 셔먼 독점금지법은 보험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4년 들어 연방대법원이 보험거래는 상거래로 그것이 주의 경계를 넘어 행하여 질 때는 주 간 거래(Interstate commerce)로서 독점금지법을 포함한 연방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sup>26)</sup> 이에 따라 보험거래와 보험비즈니스도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대상이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22) David S. Turetsky(Senior Counsel to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of DOJ)(1994), Address: MCCARRAN - FERGUSON REFORM, Nov. 12.

23) Peter E. Halle & J. Clayton Everett, Jr., 7 Bus. & Litig. Fed. Cts, 75:71(4th ed, December 2016 Update).

24) Susan B. Farmer, The McCarran-Ferguson Exemption from the US Antitrust Laws Recent Developments; 경쟁법연구 18권(2008), 474면 이하; Craig A. Berrington(2007), Congress Once Again Debates Insurers' Antitrust Exemption under McCarran-Ferguson Act, Washington Legal Foundation, May 25.

25) Federal Control of Business(2016), Chapter II. Federal Regulation of Competition; Statutes § 36. The McCarran-Ferguson Act, July.

26) 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이 판결에 대하여 보험업계는 새로운 규율을 받게 되는데 반발하였고 주 당국은 자신의 보험업에 대한 규제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역시 크게 반발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1946년에 제정된 맥캐런-퍼거슨법이며,<sup>27)</sup> 이 법의 제정을 통해 보험업에 대한 주정부의 분야별 규제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즉 맥캐런-퍼거슨법은 주 정부에 대해 보험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였으며, 보험사업(Insurance business)에 해당하는 보험회사의 활동이 주법으로 규제되는 한 연방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28)</sup> 이 결과 보험사업으로서 속성을 갖춘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해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일정 부분 면제되는 특례가 도입된 것이다.

#### 맥캐런-퍼거슨법 적용면제 관련 문언

No Act of Congress shall be construed to invalidate, impair, or supersede any law enacted by any State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or which imposes a fee or tax upon such business, unless such Act specifically relates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Provided, That after June 30, 1948, the Act of July 2, 1890, as amended, known as the Sherman Act, and the Act of October 15, 1914, as amended, known as the Clayton Act, and the Act of September 26, 1914, known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s amended [15 U.S.C. 41 et seq.], shall be applicable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to the extent that such business is not regulated by State Law.

27) Pat McCarran과 Homer Ferguson이 대표발의하였는데, McCarran은 민주당 출신 네바다 주 상원의원이고 Ferguson은 공화당 출신 미시간주 상원이었음.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주의 규제권과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8) 15 U.S.C. §§ 1011-1015, also known as Public Law 15.

## 나. 적용면제 요건

맥캐런-퍼거슨법 소정의 연방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당해 행위가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주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 하며(Regulated by state law), 셋째 보이콧, 강요, 협박에 의한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An agreement or Act to boycott, Coerce or intimidate). 이 세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회사들은 연방 독점금지법과 무관하게 상호협정 형태의 영업 관련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주 독점금지법 집행의 문제는 별개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조금 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 요건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1969년 판결에서 보험사업(Business of insurance)과 보험회사의 영업(Business of insurance company)을 구별하고, 연방 독점금지법의 면제대상은 보험회사의 모든 활동이 아니라 당해 행위의 성격이 보험사업 내지 보험업의 영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29)</sup> 이후 대법원은 동법 소정의 보험사업의 속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전개하였는데, 당해 행위가 첫째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야 하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에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하고, 보험산업 내의 주체들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30)</sup>

연방대법원이 적용제외의 대상으로 판단한 구체적 사례는 매우 다양해서 전형적인 공동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즉 보험회사들이 상호협조를 통해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행위, 즉 특정한 회사를 위한 것이거나 혹은 요율산정기관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든 묻지 않고 요율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는 행위(Preparing and Filing a rating scheme),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사이에 요율 유형을 구분하는 행위(Decision of rating classification differences), 대리점에게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의 판매권을 수여하는 행위, 보험금청구심사, 보험증권(보험계약서면)의 표준화, 위험(보험물건) 공동인수, 보험인수 여부에 관한 판단,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마케팅과 보

29) SEC v. National Securities, Inc, 393 U.S. 453, 45960.

30) Union Life Insurance Co. v. Pireno 458 U.S. 119(1982) at 129.

험증서의 배달, 재보험 등의 사례가 있다. 이 요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대체적으로 적용제외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의 요건은 주법에 의한 규제 혹은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의 핵심은 주법에 의한 규제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가 될 것인데, 연방 대법원은 주의 규제방안과 감독의 최소한의 징표(State regulatory scheme and minimal indicia of supervision)가 있으면 족하다는 일련의 판결례를 내놓고 있다.<sup>31)</sup>

FTC v. Travelers Health Ass'n 사건<sup>32)</sup>은 네브래스카주 소재 보험회사가 다른 주의 주민에게 우편을 통하여 보험을 판매한 사안이다. 네브래스카주법은 이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므로 연방거래위원회, 즉 FTC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연방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California Retail Liquor Dealers, Ass'n, v. Midcal Aluminum, Inc. 판결<sup>33)</sup>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의 규제에 관한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즉 주 정부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가 법문상 명확하고 더 나아가서 주 정부가 당해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규제, 감독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적용면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보이콧, 강요, 협박에 의한 행위 또는 이를 위한 합의는 적용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비록 주법으로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남용적 성격의 공동행위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이콧의 대상이 보험자와 보험대리인은 물론 보험계약자도 포함한다고 보았으며,<sup>34)</sup> 또한 특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다른 거래를 거절하는 것도 보이콧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sup>35)</sup>

31) California League of Independent Ins. Producers v. Aetna Cas. & Surety Co., 175 F.Supp. 857,860(N.D. Cal. 1959).

32) 362 U.S. 293(1960).

33) 445 U.S. 97(1980).

34) St. Paul Fire & Marine Ins. Co. v. Barry, 438 U.S. 531, 541(1978).

35) 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509 U.S. 764(1993).



## 다. 요약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와 연방 사이의 권한의 배분이 헌정질서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으며, 연방헌법 본문 자체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과 주가 갈등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는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과 주의 보험업에 대한 고유한 감독권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즉 기본적으로 연방과 주의 권력배분과 관련된 갈등의 소지, 강력한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 보험업계의 전반적 이익상황이 맥캐런-퍼거슨법의 제정배경이 된 것은 분명하나, 연방 독점금지법의 집행이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맥캐런법에 의한 적용면제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연방의회 차원에서 1970년 이래로 맥캐런-퍼거슨법의 폐지가 지속적으로 논란되어 거듭 안건으로 제출되어 왔다. 또한 보험업계 내에서도 동법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 즉 대규모 보험사업자들은 미국 보험시장 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주 차원의 보험감독의 개혁과 주 독점금지법 적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입법적 동향은 물론 맥캐런-퍼거슨법의 특례조항 해석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는 보다 엄격한 독점금지법 집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McCarran-Ferguson Act, Full Text

TITLE 15. COMMERCE AND TRADE

CHAPTER 20. REGULATION OF INSURANCE

15 USCS 1011-1015 (2001)

Act Mar. 9, 1945, ch 20, 59 Stat. 33, is popularly known as the McCarran-Ferguson Act.

### 15 USCS 1011 Declaration of policy

The Congress hereby declares that the continued regulation and taxation by The several States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is in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silence on the part of the Congress shall not be construed to impose any barrier to the regulation or taxation of such business by the several States.

### 15 USCS 1012 Regulation by State law

Federal law relating specifically to insurance; applicability of certain Federal laws after June 30, 1948

- (a) State regulation.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every person engaged therein, shall be subject to the laws of the several States which relate to the regulation or taxation of such business.
- (b) Federal regulation. No Act of Congress shall be construed to invalidate, impair, or supersede any law enacted by any State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or which imposes a fee or tax upon such business, unless such Act specifically relates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Provided, That after June 30, 1948, the Act of July 2, 1890, as amended, known as the Sherman Act [15 USCS 15 USCS 15 USCS 1 et seq.], and the Act of October 15, 1914, as amended, known as the Clayton Act, and the Act of September 26, 1914, known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s amended [15 USCS 15 USCS 15 USCS 41 et seq.], shall be applicable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to the extent that such business is not regulated by State law.

15 USCS 1013. Suspension until June 30, 1948, of application of certain Federal laws; Sherman Act [15 USCS 15 USCS 1 et seq.] applicable to agreements to, or acts of, boycott, coercion, or intimidation

- (a) Until June 30, 1948, the Act of July 2, 1890, as amended, known as the Sherman Act [15 USCS 15 USCS 1 et seq.], and the Act of October 15, 1914, as amended, known as the Clayton Act and the Act of September 26, 1914, known as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as amended [15 USCS 15 USCS 41 et seq.], and the Act of June 19, 1936, known as the Robinson-Patman Antidiscrimination Act, shall not apply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or to acts in the conduct thereof.
- (b) Nothing contained in this Act [15 USCS 15 USCS 1011 et seq.] shall render the said Sherman Act [15 USCS 15 USCS 1 et seq.] inapplicable to any agreement to boycott, coerce, or intimidate, or act of boycott, coercion, or intimidation.

15 USCS 1014. Applicability of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29 USCS 15 USCS 15 USCS 151 et seq.] an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Nothing contained in this Act [15 USCS 15 USCS 1011 et seq.]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in any manner the application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of the Act of July 5, 1935, as amended, known as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29 USCS 15 USCS 15 USCS 151 et seq.], or the Act of June 25, 1938, as amended, known as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 or the Act of June 5, 1920, known as the Merchant Marine Act, 1920.

15 USCS 1015. Definition of "State".

As used in this Act [15 USCS 15 USCS 1011 et seq.], the term "State" includes the several States, Alaska, Hawaii, Puerto Rico, Guam,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 3. 유럽연합

#### 가. 개관

현재 보험분야에 대해 일괄 적용제외를 허용하는 유럽연합 규칙(IBER)은 2010년에 개정된 규칙(제267/2010호, The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이다. 이 규칙은 처음부터 2017년 3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일몰조항을 달고 있었는데, 작년 말 유럽연합은 이 규칙을 예정대로 실효시키고 이를 대체하는 규칙을 더 이상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sup>36)</sup> 이 규칙의 효력상실에 앞서 유럽연합은 일괄 적용제외 제도의 지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왔고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2016년 3월에 마지막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미 2010년 개정과정에서 2003년 규칙이 정하던 네 가지 예외사유 중 두 가지를 제외하였고, 2010년 규칙이 허용한 나머지 두 제외사유 역시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거나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규칙의 실효로 보험시장 내의 각종 협정과 합의가 유럽연합기능확보조약(TFEU) 제10조에 의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경쟁법에 의한 경쟁제한성 심사의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면 금지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또 각국 경쟁법의 적용면제의 법리는 당해 회원국의 입법과 해석에 따라 여전히 적용된다. 그리고 위원회는 보험시장내의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법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는 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한다.<sup>37)</sup>

시간의 흐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비된 후 금년 3월 종국적인 폐지를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의 일괄 적용제외 법리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험시장에서 공동행위 혹은 동조행위 관련 프랙티스의 실재를 약 30여 년의 세월을 두고 구체적으로 점검한 후, 일반 경쟁법이 정하는 적용제외 법리에 맡기더라도 보험시장의 불안이 없을

36) European Commission Daily News 13/12/2016, Antitrust: The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expires on 31 March 2017.

37) EC Daily News 13/12/2016, 같은 항목.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2017년 3월 31일부로 폐지하는 최종방침이 결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전반적 여건과 수범자들의 법 감정을 감안할 때, 일단 유럽연합의 2010년 규칙과 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앞선 2003년 규칙이 정하던 적용제외 사항과 그 요건도 법제 정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적용제외 제도의 변천

유럽연합의 보험분야 일괄 적용제외 제도는 1991년 5월에 Regulation(EEC) No 1534/91로 최초로 도입되었다.<sup>38)</sup> 이 규칙 제1534/91호는 보험분야에서 체결, 운용되는 일정한 유형의 합의, 결정 그리고 일치된 행위에 대해 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유럽조약 제85조 제3항의 집행을 일괄적으로 적용면제하는 것이었다. 이 1991년 규칙은 2003년 3월 말까지 시행되었다.

2003년 들어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기존의 유럽경쟁네트워크의 체제 안에서 별도의 보험네트워크를 창설하여 보험 관련 경쟁정책 이슈들을 다루게 되었다. 이 결과로 EC조약 제81조 제3항에 대한 일괄 적용제외 제도를 다루는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다[Regulation (EC) No 358/2003].<sup>39)</sup>

이 2003년 규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를 일괄면제하고 있는데, 과거 위험률, 예정위험률의 산정 및 이를 위한 공동의 보험통계의 작성, 비구속적인 공동의 표준보험약관 제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보험이나 공동재보험 등에 관한 합의 등이다. 이 일괄 적용제외는 보험회사 사이의 영업보험료 합의나 협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영업보험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이나 영업보험료

38) Council Regulation (EEC) No 1534/91 of 31 May 1991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39) Regulation No 358/2003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이 규칙은 7년 시행 후 2010. 3. 31에 폐지되었음.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도 마찬가지다. 또한 일괄 적용제외사항으로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EC가 직권으로 혹은 신고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특정한 협정이나 합의가 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경쟁당국은 적용제외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규칙을 대체하여 공동체조약 제101조 제3항의 집행을 보험분야에서 면제하는 규칙이 2010. 3. 24 제정되었다[Commission Regulation (EU) No 267/2010]. 이 2010년 규칙은 2003년 규칙에 비해 적용제외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이 규칙 또한 앞서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일괄 조항이 부가된 한시법이다. 2010년 규칙은 규칙의 편제 면에서는 2003년 규칙과 유사하나 적용면제사유를 더욱 축소하고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 다. 2010년 규칙의 핵심내용

2010년 규칙은 제1장에서 상세한 정의규정(제1조)을 두고, 제2장과 제3장에서 두 유형의 적용제외사항과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2장은 사고율이나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표의 공동의 작성과 연구에 대한 적용제외를 정한다. 즉 특정한 위험을 담보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질병 기타 사고율과 관련된 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보험사업 관련 전반적 상황에 대한 공동연구의 수행 등에 관한 둘 이상의 보험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대해 조약 제101조 제1항(카르텔금지)의 적용을 면제한다(동 규칙 제2조). 이 적용면제를 위해서는 보험계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조사대상 위험연도에 분산된 많은 수의 데이터(보험금청구, 위험인수물량, 지급보험금 총액 등)의 수집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영업보험료의 수준을 암시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동 제3조). 또 공동행위 참가자들이 해당 요율표 등을 이용하지 않거나 그와 같은 연구조사의 결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동 제4조).

제3장은 공동보험(Coinsurance) 또는 공동재보험(Co-reinsurance)의 방식으로 일정 유형의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원수보험이나 재보험 관련 풀(Pool)을 조

직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둘 이상의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합의나 협정을 적용면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동 규칙 제5조).

규칙 제5조에 따른 적용면제는 2010년 규칙의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신중위험의 인수를 위한 공동보험 혹은 공동재보험과 관련된 협정에 대한 적용면제는 협정 체결일로부터 3년을 한도로 허용된다(동 제6조 제1항). 그리고 신중위험 인수협정 이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협정참가기업들의 점유율 규제가 적용된다. 즉 공동보험 풀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관련시장 점유율 합계가 20% 미만이어야 하고, 공동재보험 풀의 경우에는 25% 미만이어야 한다(동 규칙 제6조 제2항). 그리고 협정참가기업은 상당한 기간을 둔 통지 후에 아무런 제재 없이 당해 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동 제6조 a). 또한 풀을 조직하는 협정은 참가회사들이 풀을 통해서만 위험을 인수하거나 재보험에 부보하는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없고, 유럽연합 어느 곳에 소재하는 위험이든 동 위험에 대한 풀이나 풀 참가자들의 원수보험 인수나 재보험 관련 영업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나아가서 풀협정이 매출이나 판매를 제한하거나 시장이나 고객을 분할해서는 아니되며 풀에 참가하는 보험사들은 원수보험 영업보험료에 대해 협정할 수 없다(동 제7조 b항에서 f항).

## 라. 2010년 규칙 전문

### CHAPTER I DEFINITIONS

####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1.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a decision of an association of undertakings or a concerted practice;
2. ‘participating undertakings’ means undertakings party to the agreement and their respective connected undertakings;
3. ‘connected undertakings’ means:
  - (a) undertakings in which a party to the agreement, directly or indirectly:

- (i) has the power to exercise more than half the voting rights; or
  - (ii) has the power to appoint more than half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board of management or bodies legally representing the undertaking; or
  - (iii) as the right to manage the undertaking's affairs;
  - (b) undertaking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have, over a party to the agreement,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point (a);
  - (c) undertakings in which an undertaking referred to in point (b) has, directly or indirectly,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point (a);
  - (d) undertakings in which a party to the agreement together with one or more of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oints (a), (b) or (c), or in which two or more of the latter undertakings, jointly have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point (a);
  - (e) undertakings in which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point (a) are jointly held by:
    - (i) parties to the agreement or their respective connected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oints (a) to (d); or
    - (ii)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r one or more of their connected undertakings referred to in points (a) to (d) and one or more third parties;
4. 'co-insurance pools' means groups set up by insurance undertakings either directly or through brokers or authorised agents, with the exception of ad-hoc co-insurance agreements on the subscription market, whereby a certain part of a given risk is covered by a lead insurer and the remaining part of the risk is covered by follow insurers who are invited to cover that remainder, which:
- (a) agree to underwrite, in the name and for the account of all the participants, the insurance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or



- (b) entrust the underwriting and management of the insurance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in their name and on their behalf, to one of the insurance undertakings, to a common broker or to a common body set up for this purpose;
5. 'co-reinsurance pools' means groups set up by insurance undertakings either directly or through broker or authorised agents, possibly with the assistance of one or more reinsurance undertakings, with the exception of ad-hoc co-reinsurance agreements on the subscription market, whereby a certain part of a given risk is covered by a lead insurer and the remaining part of this risk is covered by follow insurers who are then invited to cover that remainder in order to:
- (a) reinsure mutually all or part of their liabilities in respect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 (b) incidentally accept, in the name and on behalf of all the participants, the reinsurance of the same category of risks;
6. 'new risks' means:
- (a) risks which did not previously exist, and for which insurance cover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n entirely new insurance product, not involving an extension, improvement or replacement of an existing insurance product; or
  - (b) in exceptional cases, risks the nature of which has, on the basis of an objective analysis, changed so materially that it is not possible to know in advance what subscription capacity is necessary in order to cover such a risk;
7. 'commercial premium' means the price which is charged to the purchaser of an insurance policy.

## CHAPTER II JOINT COMPILATIONS, TABLES, AND STUDIES

### Article 2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101(3) of the Treaty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Article 10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entered into between two or more undertakings in the insurance sector with respect to:

- (a) the joint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following purposes:
  - (i) calculation of the average cost of covering a specified risk in the past (hereinafter compilations);
  - (ii) construction of mortality tables, and tables showing the frequency of illness, accident and invalidity in connection with insurance involving an element of capitalisation (hereinafter tables);
- (b) the joint carrying-out of studies on the probable impact of general circumstances external to the interested undertakings, either on the frequency or scale of future claims for a given risk or risk category or on the profitability of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 (hereinafter studi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results of such studies.

### Article 3 Conditions for exemption

1.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a)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compilations or tables:
  - (a) are based on the assembly of data, spread over a number of risk years chosen as an observation period, which relate to identical or comparable risks in sufficient numbers to constitute a base which can be handled statistically and which will yield figures on the following, amongst others:
    - (i) the number of claims during the said period;
    - (ii) the number of individual risks insured in each risk year of the chosen

- observation period;
  - (iii) the total amounts paid or payable in respect of claims that have arisen during the said period;
  - (iv) the total amount of capital insured for each risk year during the chosen observation period;
  - (b) include as detailed a breakdown of the available statistics as is actuarially adequate;
  - (c) do not include in any way elements for contingencies, income deriving from reserves, administrative or commercial costs or fiscal or parafiscal contributions, and take into account neither revenues from investments nor anticipated profits.
2. The exem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compilations, tables or study results:
- (a) do not identify the insurance undertakings concerned or any insured party;
  - (b) when compiled and distributed, include a statement that they are non-binding;
  - (c) do not contain any indication of the level of commercial premiums;
  - (d) are made available on reasonable, afford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to any insurance undertaking which requests a copy of them, including insurance undertakings which are not active on the geographic or product market to which those compilations, tables or study results refer;
  - (e) except where non-disclosure is objectively justified on grounds of public security, are made available on reasonable, afford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to consumer organisations or customer organisations which request access to them in specific and precise terms for a duly justified reason.

#### Article 4 Agreements not covered by the exemption

The exem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2 shall not apply where participating undertakings enter into an undertaking or commitment among themselves, or oblige other undertakings, not to use compilations or tables that differ from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2(a), or not to depart from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ferred to in Article 2(b).

### CHAPTER III COMMON COVERAGE OF CERTAIN TYPES OF RISKS

#### Article 5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101(3) of the Treaty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Article 10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entered into between two or more undertakings in the insurance sector with respect to the setting-up and operation of pools of insurance undertakings or of insurance undertakings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for the common coverage of a specific category of risks in the form of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 Article 6 Application of exemption and market share thresholds

1. As concerns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pools which are created in order exclusively to cover new risks,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apply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establishment of the pool, regardless of the market share of the pool.
2. As concerns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pools which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1,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apply as long as this Regulation remains in force, on condition that the combined market share held by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does not exceed:
  - (a) in the case of co-insurance pools, 20 % of any relevant market;
  - (b) in the case of co-reinsurance pools, 25 % of any relevant market.

3. In calculating the market share of a participating undertaking on the relevant market, account shall be taken of:
  - (a) the market share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 within the pool in question;
  - (b) the market share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 within another pool on the same relevant market as the pool in question, to which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 is a party; and
  - (c) the market share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 on the same relevant market as the pool in question, outside any pool.
4.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market share threshold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 (a) the market share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gross premium income; if gross premium income data are not available, estimates based on other reliable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insurance cover provided or insured risk value, may be used to establish the market share of the undertaking concerned;
  - (b) the market share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data relating to the preceding calendar year.
5. Where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aragraph 2(a) is initially not more than 20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that level without exceeding 25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two consecutive calendar years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20 % threshold was first exceeded.
6. Where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aragraph 2(a) is initially not more than 20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25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on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level of 25 % was first exceeded.
7. The benefit of paragraphs 5 and 6 may not be combined so as to exceed a

- period of two calendar years.
8. Where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aragraph 2(b) is initially not more than 25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that level without exceeding 30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two consecutive calendar years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25 % threshold was first exceeded.
  9. Where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aragraph 2(b) is initially not more than 25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30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on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level of 30 % was first exceeded.
  10. The benefit of paragraphs 8 and 9 may not be combined so as to exceed a period of two calendar years.

#### Article 7 Conditions for exemption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5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 (a) each participating undertaking having given a reasonable period of notice has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pool, without incurring any sanctions;
- (b) the rules of the pool do not oblige any participating undertaking of the pool to insure or reinsure through the pool and do not restrict any participating undertaking of the pool from insuring or reinsuring outside the pool, in whole or in part, any risk of the type covered by the pool;
- (c) the rules of the pool do not restrict the activity of the pool or its participating undertakings to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of risks located in any particular geographical part of the Union;
- (d) the agreement does not limit output or sales;
- (e) the agreement does not allocate markets or customers; and
- (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of a co-reinsurance pool do not agree on the

commercial premiums which they charge for direct insurance,

#### CHAPTER IV FINAL PROVISIONS

##### Article 8 Transitional period

The prohibition laid down in Article 10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during the period from 1 April 2010 to 30 September 2010 in respect of agreements already in force on 31 March 2010 which do not satisfy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but which satisfy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provided for in Regulation (EC) No 358/2003.

##### Article 9 Period of validity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1 April 2010.

It shall expire on 31 March 2017.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Done at Brussels, 24 March 2010.

## 4. 일본

### 가. 1995년 관련 조항 개정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상호협정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그러나 독점금지법 집행의 범세계적 강화, 역외적용의 일 반화, 일괄 적용면제를 축소하는 세계적 동향에 따라, 199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사이의 공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대폭 수정하였다.<sup>40)</sup>

일본 보험업법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주 개정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인수합

병 및 사회 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2016년 5월에는 보험소비자(소위 가망객)의 의사확인 및 필요정보 제공을 강화하였고,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 관련 비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 나. 적용제외의 내용

현행 일본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에 한하여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동법 제101조), 특히 항공보험사업, 원자력 보험사업,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사업, 지진보험계약에 관한 사업 고유의 업무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사이의 공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사용,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동법 제101조 단서).

이상의 보험종목 외에 보험인수와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는, 위험의 분산 또는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간에 재보험할 것을 미리 정하여 두지 않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때이다. 그 대상으로는 보험계약의 내용(보험료율에 관한 것 제외), 손해사정방법의 결정, 재보험거래에 관한 상대방 또는 수량의 결정, 재보험료율 및 재보험에 관한 수수료의 결정 등이다.

한편 금융청은 공동행위를 함에 있어 공동행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위험의 분산 또는 평준화 기타 공동행위를 행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가하지 못하며(동법 제102조),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인가조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동행위 내용변경을 명령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있다. 일본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청의

40) Tomonobu Yamashita, Insurance Business and Competition Law in Japan, 『경쟁법연구』 제18권(2008), p. 435 이하.



공동행위의 인가에 앞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sup>41)</sup>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 후에도 인가받은 공동행위의 내용이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금융청에 대하여 공동행위의 내용변경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제105조).

#### 다. 관련 법조문(제101조 ~ 제105조)

##### 제101조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①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다음 조 제1항의 인가를 받아 하는 다음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때, 또는 제105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시가 있는 후 1월이 경과한 때(동조 제3항의 청구에 응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제103조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제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보험사업(항공기 혹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항공기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관한 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을 말하고, 항공기탑승 중인 자의 상해에 관한 보험인수에 관한 사업을 포함), 원자력보험사업(원자력시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원자력시설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관한 보험을 인수하는 사업을 말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55년 법률 제97호)의 규정에 근거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 또는 지진사업에 관한 법률(1966년 법률 제73호)에서 규정하는 지진보험계약에 관한 사업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외국 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와 하는 공동행위

2. 전호 이 외의 보험인수에 관한 사업에서, 위험의 분산 또는 평준화를 위해 사전에 손해보험회사와 다른 손해보험회사(외국 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와의 사이에 공

41) 우리 보험업법은 '사전 협의'라고 규정하여 문언상으로 일본의 동의보다 열게 규정하고 있음.

동하여 재보험할 것을 정해 두지 않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재보험계약 또는 그 재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에 대해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손해보험회사(외국 손해보험회사 등을 포함)가 하는 공동행위

가. 보험약관의 내용(보험료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결정

나. 손해사정방법의 결정

다. 재보험의 거래에 관한 상대방 또는 수량의 결정

라. 재보험료율 및 재보험에 관한 수수료의 결정

② 제10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청구가 공동행위 내용의 일부에 대해 이루어진 때에는 그 공동행위의 내용 중 그 청구에 관한 부분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항 단서(동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공시에 관한 부분에 한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 본문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02조 공동행위의 인가

① 손해보험회사는 전조 제1항 각 호의 공동행위를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인가신청에 관한 공동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동항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을 것
2.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3.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을 것
4. 위험의 분산 또는 평준화 등 공동행위를 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최소 한도일 것

#### 제103조 공동행위의 변경명령 및 인가의 취소

내각총리대신은 전조 제1항의 인가에 관한 공동행위의 내용이 동조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공동행위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그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104조 공동행위의 폐지신고

손해보험회사는 공동행위를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5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102조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제103조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때 또는 전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2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공동행위의 내용이 동조 제2항 각 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제103조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 라. 요약

일본 보험업법은 우리나라에 비해 적용제외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우선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즉, 항공보험, 원자력 보험, 지진 보험 등 특정 보험회사의 위험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대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분산 및 평준화를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들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사실상 경쟁제한적이거나 부당한 내용을 가진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이 없다면,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나 개별 사업자의 단독행위는 경쟁법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스피치, 국가별 보고서

이봉의(2008), 「보험업과 카르텔에 관한 고찰」, 『경쟁법연구』, 제18권.

이황(2008), 「보험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06. 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18권.

정호열(2011),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에 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성균관법학』,  
제23권 제3호.

Craig A. Berrington(2007. 5. 25), Congress Once Again Debates Insurers'  
Antitrust Exemption under McCarran-Ferguson Act, Washington Legal  
Foundation.

David S. Turetsky(Senior Counsel to the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of DOJ)(1994. 11. 12), Address: MCCARRAN - FERGUSON  
REFORM.

Joseph P. Bauer, McCarran Ferguson Exemption: History, Scope and the State  
Action Doctrine, 『경쟁법연구』 제18권(2008).

Susan B. Farmer, The McCarran-Ferguson Exemption from the US Antitrust  
Laws Recent Developments, 『경쟁법연구』 제18권(2008).

Tomonobu Yamashita, Insurance Business and Competition Law in Japan, 『경  
쟁법연구』 제18권(2008).

OECD Policy Roundtables - Competition and Regulation Issues in the  
Insurance Industry, DAFNE/CLP(98)20.

## 2. 단행본

성대규(2012), 『한국보험업법』 개정판, 두남.

신동권(2015), 『독점규제법』 제2판, 박영사.

이성남 · 김건(2003), 『보험업법』, 행림미디어.

이호영(2015), 『독점규제법』 제5판, 홍문사.

정호열(2008),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보험연구원.

\_\_\_\_\_(2016), 『경제법』 제5판, 박영사.

Federal Control of Business(2016), Chapter II. Federal Regulation of  
Competition; Statutes § 36. The McCarran-Ferguson Act.

Peter E. Halle & J. Clayton Everett, Jr.(2016), 7 Bus. & Litig. Fed. Cts, 75:71(4th ed).

---

## 제3부 부록

---

- I. McCarran-Ferguson법 관련 미국 법무부 보고서
- II. 유럽연합 보험 관련 적용제외 규칙(2003, 1992)
- III. 일본 보험업법과 시행규칙의 상호협정 관련 조항

### I. 맥캐런-퍼거슨법 관련 미국 법무부 보고서

#### 1. 개관

미국 연방 법무성이 OECD 경쟁당국에 자국의 보험분야 적용제외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개별국가 보고서(Country report)이다. 이 문건은 맥캐런-퍼거슨 소정의 적용면제에 대한 미국 경쟁당국의 공식적인 견해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2. OECD Policy Roundtables – Competition and Regulation Issues in the Insurance Industry, DAFFE/CLP(98)20, pp. 206–210.

##### The McCarran–Ferguson Act

Enacted in 1945, the McCarran-Ferguson Act, 15 U.S.C. § 1012(b), exempts the Business of insurance from the federal antitrust law to the extent such business is regulated by state law. But the McCarran Act is limited by its own exception that

the exemption does not extend to “any agreement to boycott, coerce, or intimidate, or act of boycott, coercion, or intimidation.” 15 U.S.C § 1013(b).

### The “Business of insurance” requirement

In *S.E.C. v. National Securities, Inc.*, 393 U.S. 453 (1969), the Court found that the McCarran Act, even apart from the boycott exception, did not exempt from federal regulation all activities of insurance companies. The McCarran Act exempted the “business” of insurance, not insurance companies.

Not all acts of insurance companies were the Business of insurance, The Court considered what constitutes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determin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er and insured was at the “core”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The Court enumerated certain acts which clearly were the Business of insurance: fixing of rates between insurer and insured, selling and advertising of policies, and licensing of companies and agents. Beyond those enumerated acts, the determination must be based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er and insured, Acts within the scope of that relationship or closely related to that relationship are within the Business of insurance.

The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at not all aspects of a third-party provider contract are within the McCarran Act. In *Group Life & Health Ins. Co. v. Royal Drug Co., Inc.*, 440 U.S. 205 (1979), *aff'g* 561 F.2d 262 (5th Cir. 1977),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fixing of prices between Blue Shield and participating pharmacies did not involve an insurance relationship between insurer and insured. Plaintiffs challenged Blue Shield's prepaid prescription drug policy which entitled insureds of Blue Shield to purchase drugs from any pharmacy. Blue Shield had entered into agreements with pharmacies to provide pharmaceutical services. If the insured purchased from a participating pharmacy, the insured paid only two

dollars, the policy deductible amount. If the insured used a non-participating pharmacy, the insured paid full price, and then was reimbursed to the extent of 75 percent of the price exceeding the two dollar deductible amount. Blue Cross limited its payment to participating pharmacies to two dollars above the pharmacy's cost. This two dollar markup was called a "professional dispensing fee." Blue Shield argued that the fixing of prices was directly related to its relationship with insureds, in that, it contained costs, thereby reducing premiums.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cost containment argument.

Similarly, in *Union Labor Life Insurance Co. v. Pireno*, 458 U.S. 119 (1982), the Court held that the use of a peer review committee to determine the reasonableness of chiropractic charges did not constitute the "Business of insurance" within the meaning of the McCarran Act. The Court reiterated the three criteria, outlined in *Royal Drug*, said to be relevant in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practice is par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i.e., whether the practice has the effect of transferring or spreading a policyholder's risk, whether the practice is an integral part of the policy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and whether the practice is limited to entities within the insurance industry), and found that the peer review procedure met none of the criteria.

A recent pre-Pireno Federal Trade Commission opinion letter, however, advises that a peer review plan would not violate antitrust laws if certain safeguards are followed. Advisory Opinion Letter to Peter M. Sfikas, 99 F.T.C. 648 (1982). Among the suggestions included are the selection of a consumer representative to be on the panel, stressing the voluntary and advisory nature of the peer review process, and making clear that no preferred status is conferred upon participants or non-preferred status conferred upon non-participants.

The Blue Cross/Blue Shield system of contracting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rather than indemnifying costs of health care services, has been found to



be the Business of insurance, *Ocean State Physicians' Health Plan v. Blue Cross and Blue Shield of Rhode Island*, 883 F.2d 1101, 1108 (1st Cir. 1989), cert. denied, 110 S. Ct. 1473 (1990); *Health Care Equalization Committee v. Iowa Medical Society*, 851 F.2d 1020, 1028 (8th Cir. 1988); *Frankford Hospital v. Blue Cross of Greater Philadelphia*, 417 F.

Supp. 1104, 1106 (E.D. Pa. 1976), aff'd per curiam, 554 F.2d 1253 (3d Cir.), cert. denied, 434 U.S. 860(1977).

### The “regulation by state law” requirement

The Supreme Court has suggested that this requirement is satisfied by general standards set by the state. See *Federal Trade Commission v. National Casualty Co.*, 357 U.S. 560, 564-65 (1958). Lower courts have applied the “general standards” requirement fairly broadly. See *Ocean State*, 883 F.2d at 1109 (state did not have to approve specific elements of HMO and adverse selection policy); *In re Workers' Compensation Antitrust Litigation*, 867 F.2d 1552, 1559 (8th Cir. 1989), cert. denied, 492 U.S. 920 (1989) (“The fundamental issue is whether a general prohibition providing an insurance commissioner with authority under a state unfair method of competition or unfair practices act is regulation under the McCarran-Ferguson Act.”), cert. denied, 493 U.S. 818 (1989); *Mackey v. Nationwide Insurance Cos.*, 724 F.2d 419, 421 (4th Cir. 1984) (“A body of state law which proscribes unfair insurance practices and provides for administrative supervision and enforcement satisfies the state requirement of the exemption.”).

### The “boycott, coercion, or intimidation” requirement

Much of the case law interpreting this provision focuses on the “boycott” rather

than the “coercion or intimidation” aspect of the exception. See, e.g., *Hartford Fire Ins. v. California*, 509 U.S. 764 (1993) (complaint sufficiently alleged statutory boycott exception); *St. Paul Fire and Marine Ins. Co. v. Barry*, 438 U.S. 531 (1978). The holding of these decisions is that a boycott is a refusal to deal in aid of achieving a purpose unrelated to that refusal to deal. In effect, a boycott is a tactic designed to coerce a target into cooperating in connection with a separate transaction. The effect of these decisions is to confirm that much insurance industry activity that might otherwise violate the U.S. antitrust laws is in fact exempt from those laws.

“Coercion” does not generally include situations where options have not been entirely closed off to the allegedly coerced parties, even though such options may have been made more expensive. See *Ocean State* (attempt to lure subscribers from competing HMO by offering favorable rates for traditional indemnity coverage did not amount to coercion); *Klamath-Lake Pharmaceutical Association v. Klamath Medical Service Bureau*, 701 F.2d 1276 (9th Cir. 1983), cert. denied, 464 U.S. 822 (1984) (policy that insureds use provider's pharmacy to receive benefits did not constitute coercion where insureds were not precluded from using other pharmacies). In *Feinstein v. Nettleship Co. of Los Angeles*, 714 F.2d 928 (9th Cir. 1983), cert. denied, 466 U.S. 972 (1984), it was held that a medical association's agreement with insurers to offer malpractice insurance through an exclusive broker to association members was not a boycott where the agreement did not restrict members from dealing with other insurers, even though participation in the plan was restricted to members only. Recent opinions of lower courts, as well, indicate that the McCarran-Ferguson insurance exemption will be narrowly construed. In *Hahn v. Oregon Physicians Service*, 689 F.2d 840 (9th Cir. 1982), cert. denied, 462 U.S. 1133 (1983), the court held that the exclusion of podiatric services from health plan coverage could not be justified by risk-related reasons and was therefore not

at the core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In *Portland Retail Druggists Association v.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 662 F.2d 641 (9th Cir. 1981), cert. denied, 469 U.S. 1229 (1985), the court held that contractual arrangements and conditions by which HMOs acquired drugs from manufacturers, wholesalers, and distributors were not within the Business of insurance, thereby rendering the requirement that customers buy HMO drug plans in order to obtain health plans amenable to suit as a tying arrangement. In *Nurse Midwifery Associates v. Hibbett*, 549 F. Supp. 1185 (M.D. Tenn. 1982), the court held that the concerted activities of defendant obstetricians and a provider of malpractice insurance effectively denying coverage to physicians who associated with nurse midwives was not the Business of insurance. In *Kartell v. Blue Shield of Massachusetts*, 542 F. Supp. 782 (D. Mass.), appeal dismissed, 687 F.2d 543 (1st Cir. 1982), the court held that an arrangement between Blue Shield and participating doctors, whereby the doctors would accept stipulated amounts as payment in full, involved some risk, in that the doctors would only receive a pro rata share if funds were insufficient, but was not enough to qualify as the Business of insurance. In *Blue Cross of Washington and Alaska v. Kitsap Physicians Service*, 1982-1 Trade Cas. (CCH) ¶ 64,588 (W.D. Wash. 1981), the court held that a bylaw of a health insurance provider, denying membership to any surgeon or physician who contracts to provide services to any health care provider which utilizes a closed panel, was not exempt from antitrust scrutiny under the McCarran Act.

## Ⅱ. 유럽연합 보험분야 적용제외 규칙

### 1. 개관

유럽연합 보험분야 일괄 적용제외 규칙(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약칭 IBER)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현행 2010년 개정규칙은 2017년 3월 31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보험분야 경쟁법 적용제외에 관한 규칙은 역내국가의 보험시장의 상황 그리고 보험거래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상호협정 제도의 개편에서 유력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록에서는 1992년 규칙과 2003년 규칙을 수록한다.

#### 규칙의 개정경과

1. 1992년 규칙 제정(Regulation 3932/92, 효력기간 2003년 3월 31일까지)
2. 2003년 규칙[Regulation (EC) No 358/2003, 2010. 3. 31까지 발효]
3. 2010년 규칙[Commission Regulation (EU) No 267/2010, 2017. 3. 31까지 발효]
4. 2017. 3. 31 일몰 예정

### 2. 2003년 Regulation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58/2003 of 27 February 2003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 CHAPTER I. EXEMPTION AND DEFINITIONS

##### Article 1. Exemption

Pursuant to Article 81(3) of the Treaty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it is hereby declared that Article 8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entered into between two or more undertakings in the insurance sec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with respect to:

- (a) the join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 calculations of the average cost of covering a specified risk in the past (hereinafter “calculations”);
  - in connection with insurance involving an element of capitalisation, mortality tables, and tables showing the frequency of illness, accident and invalidity (hereinafter “tables”);
- (b) the joint carrying-out of studies on the probable impact of general circumstances external to the interested undertakings, either on the frequency or scale of future claims for a given risk or risk category or on the profitability of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 (hereinafter “studi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results of such studies;
- (c) the join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non-binding standard policy conditions for direct insurance (hereinafter “standard policy conditions”);
- (d) the join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non-binding models illustrating the profits to be realised from an insurance policy involving an element of capitalisation (hereinafter “models”);
- (e) the setting-up and operation of groups of insurance undertakings or of insurance undertakings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for the common coverage of a specific category of risks in the form of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and
- (f) the establishment, recognition and distribution of:
  - technical specifications, rules or codes of practice concerning those types of security devices for which there do not exist at Community level technical specifications, classification systems, rules, procedures or codes of practice

harmonised in line with Community legislation covering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procedures for assessing and approving the compliance of security devices with such specifications, rules or codes of practice,

- technical specifications, rules or codes of practice for th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security devices, and procedures for assessing and approving the compliance of undertakings which install or maintain security devices with such specifications, rules or codes of practice,

##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Regula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1.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a decision of an association of undertakings or a concerted practice;
2. “Participating undertakings” means undertakings party to the agreement and their respective connected undertakings;
3. “Connected undertakings” means:
  - (a) undertakings in which a party to the agreement, directly or indirectly:
    - (i) has the power to exercise more than half the voting rights, or
    - (ii) has the power to appoint more than half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board of management or bodies legally representing the undertaking, or
    - (iii) has the right to manage the undertaking's affairs;
  - (b) undertaking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have, over a party to the agreement,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a);
  - (c) undertakings in which an undertaking referred to in (b) has, directly or indirectly,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a);
  - (d) undertakings in which a party to the agreement together with one or more of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a), (b) or (c), or in which two or more of the

latter undertakings, jointly have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a);

(e) undertakings in which the rights or the powers listed in (a) are jointly held by:

- (i) parties to the agreement or their respective connected undertakings referred to in (a) to (d), or
  - (ii) one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or one or more of their connected undertakings referred to in (a) to (d) and one or more third parties.
4. “Standard policy conditions” refers to any clauses contained in model or reference insurance policies prepared jointly by insurers or by bodies or associations of insurers;
5. “Co-insurance groups” means groups set up by insurance undertakings which:
- (i) agree to underwrite in the name and for the account of all the participants the insurance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or
  - (ii) entrust the underwriting and management of the insurance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in their name and on their behalf to one of the insurance undertakings, to a common broker or to a common body set up for this purpose;
6. “Co-reinsurance groups” means groups set up by insurance undertakings, possibly with the assistance of one or more re-insurance undertakings:
- (i) in order to reinsure mutually all or part of their liabilities in respect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 (ii) incidentally, to accept in the name and on behalf of all the participants the re-insurance of the same category of risks;
7. “New risks” means risks which did not exist before, and for which insurance cover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n entirely new insurance product, not involving an extension, improvement or replacement of an existing insurance

product.

8. “Security devices” means components and equipment designed for loss prevention and reduction, and systems formed from such elements.
9. “Commercial premium” means the price which is charged to the purchaser of an insurance policy.

## CHAPTER II. JOINT CALCULATIONS, TABLES, AND STUDIES

### Article 3. Conditions for exemption

1.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a)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calculations or tables:
  - (a) are based on the assembly of data, spread over a number of risk-years chosen as an observation period, which relate to identical or comparable risks in sufficient number to constitute a base which can be handled statistically and which will yield figures on (inter alia):
    - the number of claims during the said period,
    - the number of individual risks insured in each risk-year of the chosen observation period,
    - the total amounts paid or payable in respect of claims arisen during the said period,
    - the total amount of capital insured for each risk-year during the chosen observation period;
  - (b) include as detailed a breakdown of the available statistics as is actuarially adequate;
  - (c) do not include in any way elements for contingencies, income deriving from reserves, administrative or commercial costs or fiscal or para-fiscal contributions, and take into account neither revenues from investments nor



anticipated profits.

2. The exemptions provided for in both Article 1(a) and Article 1(b)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calculations, tables or study results:
  - (a) do not identify the insurance undertakings concerned or any insured party;
  - (b) when compiled and distributed, include a statement that they are non-binding;
  - (c) are made available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to any insurance undertaking which requests a copy of them, including insurance undertakings which are not active on the geographical or product market to which those calculations, tables or study results refer.

#### **Article 4. Agreements not covered by the exemption**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 shall not apply where participating undertakings enter into an undertaking or commitment among themselves, or oblige other undertakings, not to use calculations or tables that differ from thos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a), or not to depart from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ferred to in Article 1(b).

### **CHAPTER III. STANDARD POLICY CONDITIONS AND MODELS**

#### **Article 5. Conditions for exemption**

1.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c)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standard policy conditions:
  - (a) ar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with an explicit statement that they are non-binding and that their use is not in any way recommended;
  - (b) expressly mention that participating undertakings are free to offer different policy conditions to their customers; and
  - (c) are accessible to any interested person and provided simply upon request.

2.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d)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non-binding models ar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only by way of guidance.

#### **Article 6. Agreements not covered by the exemption**

1.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c) shall not apply where the standard policy conditions contain clauses which:
  - (a) contain any indication of the level of commercial premiums;
  - (b) indicate the amount of the cover or the part which the policyholder must pay himself (the “excess”);
  - (c) impose comprehensive cover including risks to which a significant number of policyholders are not simultaneously exposed;
  - (d) allow the insurer to maintain the policy in the event that he cancels part of the cover, increases the premium without the risk or the scope of the cover being changed (without prejudice to indexation clauses), or otherwise alters the policy conditions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policyholder;
  - (e) allow the insurer to modify the term of the policy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policyholder;
  - (f) impose on the policyholder in the non-life assurance sector a contract period of more than three years;
  - (g) impose a renewal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where the policy is automatically renewed unless notice is given upon the expiry of a given period;
  - (h) require the policyholder to agree to the reinstatement of a policy which has been suspended on account of the disappearance of the insured risk, if he is once again exposed to a risk of the same nature;
  - (i) require the policyholder to obtain cover from the same insurer for different risks;

- (j) require the policyholder, in the event of disposal of the object of insurance, to make the acquirer take over the insurance policy;
  - (k) exclude or limit the cover of a risk if the policyholder uses security devices, or installing or maintenance undertakings, which are not ap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pecifications agreed by an association or associations of insurers in one or several other Member States or at the European level.
2.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c) shall not benefit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agree, or agree to oblige other undertakings, not to apply conditions other than standard policy condi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3. Without prejudice to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insurance conditions for particular social or occupational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c)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exclude the coverage of certain risk categori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policyholder.
  4.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d) shall not apply where, without prejudice to legally imposed obligations, the non-binding models include only specified interest rates or contain figures indicating administrative costs;
  5.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d) shall not benefit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concert or undertake among themselves, or oblige other undertakings, not to apply models illustrating the benefits of an insurance policy other than those established pursuant to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 CHAPTER IV. COMMON COVERAGE OF CERTAIN TYPES OF RISKS

**Article 7. Application of exemption and market share thresholds**

1. As concerns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groups which are created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Regulation in order exclusively to cover new risks,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e) shall apply fo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rst establishment of the group, regardless of the market share of the group.
2. As concerns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groups which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first paragraph (for the reason that they have been in existence for over three years or have not been created in order to cover a new risk),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e) shall apply as long as the present Regulation remains in force, on condition that the insurance products underwritten within the grouping arrangement by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or on their behalf do not, in any of the markets concerned, represent:
  - (a) in the case of co-insurance groups, more than 20 % of the relevant market;
  - (b) in the case of co-reinsurance groups, more than 25 % of the relevant market.
3.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market share threshold provided for in the second paragraph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 (a) the market share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gross premium income; if gross premium income data are not available, estimates based on other reliable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insurance cover provided or insured risk value, may be used to establish the market share of the undertaking concerned;
  - (b) the market share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data relating to the preceding calendar year;

- (c) the market share held by the undertakings referred to in Article 2(3)(e) shall be apportioned equally to each undertaking having the rights or the powers listed in Article 2(3)(a).
4. If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oint (a) of the second paragraph is initially not more than 20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this level without exceeding 22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e)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two consecutive calendar years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20 % threshold was first exceeded.
  5. If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oint (a) of the second paragraph is initially not more than 20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22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e) shall continue to apply for on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level of 22 % was first exceeded.
  6. The benefit of paragraphs 4 and 5 may not be combined so as to exceed a period of two calendar years.
  7. If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oint (b) of the second paragraph is initially not more than 25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this level without exceeding 27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e)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two consecutive calendar years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25 % threshold was first exceeded.
  8. If the market share referred to in point (b) of the second paragraph is initially not more than 25 % but subsequently rises above 27 %,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e) shall continue to apply for one calendar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level of 27 % was first exceeded.
  9. The benefit of paragraphs 7 and 8 may not be combined so as to exceed a period of two calendar years.

**Article 8. Conditions for exemption**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e)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 (a) each participating undertaking has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group, subject to a period of notice of not more than one year, without incurring any sanctions;
- (b) the rules of the group do not oblige any member of the group to insure or re-insure through the group, in whole or in part, any risk of the type covered by the group;
- (c) the rules of the group do not restrict the activity of the group or its members to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of risks located in any particular geographical part of the European Union;
- (d) the agreement does not limit output or sales;
- (e) the agreement does not allocate markets or customers;
- (f) the members of a co-reinsurance group do not agree on the commercial premiums which they charge in direct insurance; and
- (g) no member of the group, or undertaking which exercises a determining influence on the commercial policy of the group, is also a member of, or exercises a determining influence on the commercial policy of, a different group active on the same relevant market.

**CHAPTER V. SECURITY DEVICES****Article 9. Conditions for exemption**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f)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 (a)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compliance assessment procedures are precise, technically justified and in proportion to the performance to be attained by the

security device concerned;

- (b) the rules for the evaluation of installation undertakings and maintenance undertakings are objective, relate to their technical competence and are applied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 (c) such specifications and rules ar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with an accompanying statement that insurance undertakings are free to accept for insurance, on whatever terms and conditions they wish, other security devices 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undertakings which do not comply with these technical specifications or rules;
- (d) such specifications and rules are provided simply upon request to any interested person;
- (e) any lists of security devices and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undertakings compliant with specifications include a classification based on the level of performance obtained;
- (f) a request for an assessment may be submitted at any time by any applicant;
- (g) the evaluation of conformity does not impose on the applicant any expenses that are disproportionate to the costs of the approval procedure;
- (h) the devices and installation undertakings and maintenance undertakings that meet the assessment criteria are certified to this effect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of the date of application, except where technical considerations justify a reasonable additional period;
- (i) the fact of compliance or approval is certified in writing;
- (j) the grounds for a refusal to issue the certificate of compliance are given in writing by attaching a duplicate copy of the records of the tests and controls that have been carried out;
- (k) the grounds for a refusal to take into account a request for assessment are provided in writing; and

- (l) the specifications and rules are applied by bodies accredited to norms in the series EN 45 000 and EN ISO/IEC 17025.

## CHAPTER VI. MISCELLANEOUS PROVISIONS

### **Article 10. Withdrawal**

The Commission may withdraw the benefit of this Regulation, pursuant to Article 7 of Council Regulation (EEC) No 1534/91, where either on its own initiative or at the request of a Member State or of a natural or legal person claiming a legitimate interest, it finds in a particular case that an agreement to which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 applies nevertheless has effect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81(3) of the Treaty, and in particular where,

- (a) studies to which the exemption in Article 1(b) applies are based on unjustifiable hypotheses;
- (b) standard policy conditions to which the exemption in Article 1(c) applies contain clauses which create, to the detriment of the policyholder,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 (c) in relation to the common coverage of certain types of risks to which the exemption in Article 1(e) applies, the setting-up or operation of a group results, through the conditions governing admission, the definition of the risks to be covered, the agreements on retrocession or by any other means, in the sharing of the markets for the insurance products concerned or for neighbouring products.

### **Article 11. Transitional period**

The prohibition laid down in Article 81(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during the



period from 1 April 2003 to 31 March 2004 in respect of agreements already in force on 31 March 2003 which do not satisfy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but which satisfy the conditions for exemption provided for in Regulation (EEC) No 3932/92.

### **Article 12. Period of validity**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1 April 2003. It shall expire on 31 March 2010.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 **3. 1992년 규칙**

COMMISSION REGULATION (EEC) No 3932/92 of 21 December 1992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 (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 **TITLE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Pursuant to Article 85 (3) of the Treaty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it is hereby declared that Article 85 (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decisions by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insurance sector which seek cooperation with respect to:

- (a) the establishment of common risk-premium tariffs based on collectively ascertained statistics or on the number of claims;
- (b)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 policy conditions;
- (c) the common coverage of certain types of risks;

- (d) the establishment of common rules on the testing and acceptance of security devices.

## TITLE II Calculation of the premium

### Article 2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 (a) hereof shall apply to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relate to:

- (a) the calculation of the average cost of risk cover (pure premiums) or the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mortality tables, and tables showing the frequency of illness, accident and invalidity, in connection with insurance involving an element of capitalization - such tables being based on the assembly of data, spread over a number of risk-years chosen as an observation period, which relate to identical or comparable risks in sufficient number to constitute a base which can be handled statistically and which will yield figures on (inter alia):
- the number of claims during the said period,
  - the number of individual risks insured in each risk-year of the chosen observation period,
  - the total amounts paid or payable in respect of claims arisen during the said period,
  - the total amount of capital insured for each risk-year during the chosen observation period,
- (b) the carrying-out of studies on the probable impact of general circumstances external to the interested undertakings on the frequency or scale of claims, or the profitability of different types of investment, and the distribution of their results,

**Article 3**

The exemption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 (a) the calculations, tables or study results referred to in Article 2, when compiled and distributed, include a statement that they are purely illustrative;
- (b) the calculations or tables referred to in Article 2 (a) do not include in any way loadings for contingencies, income deriving from reserves, administrative or commercial costs comprising commissions payable to intermediaries, fiscal or para-fiscal contributions or the anticipated profits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 (c) the calculations, tables or study results referred to in Article 2 do not identify the insurance undertakings concerned.

**Article 4**

The exemption shall not benefit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enter into an undertaking or commitment among themselves, or which oblige other undertakings, not to use calculations or tables that differ from thos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2 (a), or not to depart from the results of the studies referred to in Article 2 (b).

### TITLE III Standard policy conditions for direct insurance

**Article 5**

1.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 (b) shall apply to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standard policy conditions for direct insurance.
2.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common models illustrating the profits to be realized from an insurance policy involving an element of capitalization.

#### Article 6

1. The exemption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standard policy conditions referred to in Article 5 (1):
  - (a) ar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with an explicit statement that they are purely illustrative; and
  - (b) expressly mention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t conditions may be agreed; and
  - (c) are accessible to any interested person and provided simply upon request.
2. The exemption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the illustrative models referred to in Article 5 (2) ar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only by way of guidance.

#### Article 7

1. The exemption shall not apply where the standard policy conditions referred to in Article 5 (1) contain clauses which:
  - (a) exclude from the cover losses normally relating to the class of insurance concerned, without indicating explicitly that each insurer remains free to extend the cover to such events;
  - (b) make the cover of certain risks subject to specific conditions, without indicating explicitly that each insurer remains free to waive them;
  - (c) impose comprehensive cover including risks to which a significant number of policyholders is not simultaneously exposed, without indicating explicitly that each insurer remains free to propose separate cover;
  - (d) indicate the amount of the cover or the part which the policyholder must pay himself (the 'excess');
  - (e) allow the insurer to maintain the policy in the event that he cancels part of

- the cover, increases the premium without the risk or the scope of the cover being changed (without prejudice to indexation clauses), or otherwise alters the policy conditions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policyholder;
- (f) allow the insurer to modify the term of the policy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policyholder;
  - (g) impose on the policyholder in the non-life assurance sector a contract period of more than three years;
  - (h) impose a renewal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where the policy is automatically renewed unless notice is given upon the expiry of a given period;
  - (i) require the policyholder to agree to the reinstatement of a policy which has been suspended on account of the disappearance of the insured risk, if he is once again exposed to a risk of the same nature;
  - (j) require the policyholder to obtain cover from the same insurer for different risks;
  - (k) require the policyholder, in the event of disposal of the object of insurance, to make the acquirer take over the insurance policy.
2. The exemption shall not benefit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concert or undertake among themselves, or oblige other undertakings not to apply condition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5 (1).

### **Article 8**

Without prejudice to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insurance conditions for particular social or occupational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the exemption shall not apply to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exclude the coverage of certain risk categorie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policyholder.

## Article 9

1. The exemption shall not apply where, without prejudice to legally imposed obligations, the illustrative models referred to in Article 5 (2) include only specified interest rates or contain figures indicating administrative costs;
2. The exemption shall not benefit undertakings or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ich concert or undertake among themselves, or oblige other undertakings not to apply models illustrating the benefits of an insurance policy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Article 5 (2).

## TITLE IV Common coverage of certain types of risks

## Article 10

1. The exemption under Article 1 (c) hereof shall apply to agreement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setting-up and operation of groups of insurance undertakings or of insurance undertakings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for the common coverage of a specific category of risks in the form of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 (a) ‘co-insurance groups’ means groups set up by insurance undertakings which:
    - agree to underwrite in the name and for the account of all the participants the insurance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or
    - entrust the underwriting and management of the insurance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in their name and on their behalf to one of the insurance undertakings, to a common broker or to a common body set up for this purpose;
  - (b) ‘co-reinsurance groups’ means groups set up by insurance undertakings, possibly with the assistance of one or more re-insurance undertakings:

- in order to reinsure mutually all or part of their liabilities in respect of a specified risk category,
  - incidentally, to accept in the name and on behalf of all the participants the re-insurance of the same category of risks.
3. The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determine:
- (a)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covered by the co-insurance or co-reinsurance;
  - (b) the conditions governing admission to the group;
  - (c) the individual own-account shar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risks co-insured or co-reinsured;
  - (d) the conditions for individual withdrawal of the participants;
  - (e) the rules gov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group.
4. The agreements alluded to in paragraph 2 (b) may further determine:
- (a) the shares in the risks covered which the participants to not pass on for co-reinsurance (individual retentions);
  - (b) the cost of co-reinsurance, which includes both the operating costs of the group and the remuneration of the participants in their capacity as co-reinsurers.

## Article 11

1. The exemption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 (a) the insurance products underwritten by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or on their behalf do not, in any of the markets concerned, represent:
    - in the case of co-insurance groups, more than 10 % of all the insurance products that are identical or regarded as simila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isks covered and of the cover provided,
    - in the case of co-reinsurance groups, more than 15 % of all the insurance

products that are identical or regarded as simila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isks covered and of the cover provided;

(b) each participating undertaking has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group, subject to a period of notice of not more than six months, without incurring any sanctions.

2. 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 1, the respective percentages of 10 and 15 % apply only to the insurance products brought into the group, to the exclusion of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underwritten by the participating companies or on their behalf and which are not brought into the group, where this group covers:

- catastrophe risks where the claims are both rare and large,
- aggravated risks which involve a higher probability of claim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 insured.

This derog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 that none of the concerned undertakings shall participate in another group that covers risks on the same market, and
- with respect to groups which cover aggravated risks, that the insurance products brought into the group shall not represent more than 15 % of all identical or similar products underwritten by the participating companies or on their behalf on the market concerned.

## **Article 12**

Apart from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0, no restriction on competition shall be imposed on the undertakings participating in a co-insurance group other than:

- (a) the obligation, in order to qualify for the co-insurance cover within the group, to
- take preventive measures into account,



- use the general or specific insurance conditions accepted by the group,
- use the commercial premiums set by the group;
- (b) the obligation to submit to the group or approval any settlement of a claim relating to a co-insured risk;
- (c) the obligation to entrust to the group the negotiation of reinsurance agreements on behalf of all concerned;
- (d) a ban on reinsuring the individual share of the co-insured risk.

### Article 13

Apart from the oblig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10, no restriction on competition shall be imposed on the undertakings participating in a co-reinsurance group other than:

- (a) the obligation, in order to qualify for the co-reinsurance cover, to
  - take preventive measures into account,
  - use the general or specific insurance conditions accepted by the group,
  - use a common risk-premium tariff for direct insurance calculated by the group, regard being had to the probable cost of risk cover or, where there is not sufficient experience to establish such a tariff, a risk premium accepted by the group,
  - participate in the cost of the co-reinsurance;
- (b) the obligation to submit to the group for approval the settlement of claims relating to the co-reinsured risks and exceeding a specified amount, or to pass such claims on to it for settlement;
- (c) the obligation to entrust to the group the negotiation of retrocession agreements on behalf of all concerned;
- (d) a ban on reinsuring the individual retention or retroceding the individual share.

## TITLE V Security devices

### Article 14

The exem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 (d) shall apply to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which have as their object the establishment, recognition and distribution of:

- technical specifications, in particular technical specifications intended as future European norms, and also procedures for assessing and certifying the compliance with such specifications of security devices and thei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 rules for the evaluation and approval of installation undertakings or maintenance undertakings.

### Article 15

The exemption shall apply on condition that:

- (a)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compliancy assessment procedures are precise, technically justified and in proportion to the performance to be attained by the security device concerned;
- (b) the rules for the evaluation of installation undertakings and maintenance undertakings are objective, relate to their technical competence and are applied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 (c) such specifications and rules ar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with the statement that insurance undertakings are free to accept other security devices or approve othe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undertakings which do not comply with these technical specifications or rules;
- (d) such specifications and rules are provided simply upon request to any interested person;

- (e) such specifications include a classification based on the level of performance obtained;
- (f) a request for an assessment may be submitted at any time by any applicant;
- (g) the evaluation of conformity does not impose on the applicant any expenses that are disproportionate to the costs of the approval procedure;
- (h) the devices and installation undertakings and maintenance undertakings that meet the assessment criteria are certified to this effect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of the date of application, except where technical considerations justify a reasonable additional period;
- (i) the fact of compliance or approval is certified in writing;
- (j) the grounds for a refusal to issue the certificate of compliance are given in writing by attaching a duplicate copy of the records of the tests and controls that have been carried out;
- (k) the grounds for a refusal to take into account a request for assessment are provided in writing;
- (l) the specifications and rules are applied by bodies observing the appropriate provisions of norms in the series EN 45 000.

## TITLE VI Miscellaneous provisions

### Article 16

1.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shall also apply where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lay down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undertakings connected with them. The market shares, legal acts or conduct of the connected undertakings shall be considered to be those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2. 'Connected undertakings'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means:
  - (a) undertakings in which a participating undertaking, directly or indirectly:

- owns more than half the capital or business assets, or
  - has the power to exercise more than half the voting rights, or
  - has the power to appoint more than half the members of the supervisory board, board of directors or bodies legally representing the undertaking, or
  - has right to manage the affairs of the undertaking;
- (b) undertakings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have in or over a participating undertaking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a);
- (c) undertakings in which an undertaking referred to in (b) directly or indirectly has the rights or powers listed in (a).
3. Undertakings in which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or undertakings connected with them have directly or indirectly the rights or powers set out in paragraph 2 (a) shall be considered to be connected with each of the participating undertakings.

### Article 17

The Commission may withdraw the benefit of this Regulation, pursuant to Article 7 of 1534/91, where it finds in a particular case that an agreement, decision or concerted practice exempted under this Regulation nevertheless has certain effect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85 (3) of the EEC Treaty, and in particular where,

- in the cases referred to in Title II, the studies are based on unjustifiable hypotheses,
- in the cases referred to in Title III, the standard policy conditions contain clauses other than those listed in Article 7 (1) which create, to the detriment of the policyholder,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 in the cases referred to in Title IV:

- (a) the undertakings participating in a group would not, having regard to the nature, characteristics and scale of the risks concerned, encounter any significant difficulties in operating individually on the relevant market without organizing themselves in a group;
- (b) one or more participating undertakings exercise a determining influence on the commercial policy of more than one group on the same market;
- (c) the setting-up or operation of a group may, through the conditions governing admission, the definition of the risks to be covered, the agreements on retrocession or by any other means, result in the sharing of the markets for the insurance products concerned or form neighbouring products;
- (d) an insurance group which benefits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2) has such a position with respect to aggravated risks that the policyholders encounter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finding cover outside this group.

## Article 18

1. As regards agreements existing on 13 March 1962 and notified before 1 February 1963 and agreements, whether notified or not, to which Article 4 (2) (1) of Regulation No 17 applies, the declaration of inapplicability of Article 85 (1) of the Treaty contained in this Regulation shall have retroactive effect from the time at which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were fulfilled.
2. As regards all other agreements notified before this Regulation entered into force, the declaration of inapplicability of Article 85 (1) of the Treaty contained in this Regulation shall have retroactive effect from the time at which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were fulfilled, or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whichever is later.

### Article 19

If agreements existing on 13 March 1962 and notified before 1 February 1963, or agreements covered by Article 4 (2) (1) of Regulation No 17 and notified before 1 January 1967, are amended before 31 December 1993 so as to fulfil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and if the amendment is communicated to the Commission before 1 April 1994, the prohibition in Article 85 (1) of the Treaty shall not apply in respect of the period prior to the amendment. The communication shall take effect from the time of its receipt by the Commission. Where the communication is sent by registered post, it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te shown on the postmark of the place of posting.

### Article 20

1. As regards agreements covered by Article 85 of the Treaty as a result of the accession of the United Kingdom, Ireland and Denmark, Articles 18 and 19 shall apply,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levant dates shall be 1 January 1973 instead of 13 March 1962 and 1 July 1973 instead of 1 February 1963 and 1 January 1967.
2. As regards agreements covered by Article 85 of the Treaty as a result of the accession of Greece, Articles 18 and 19 shall apply,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levant dates shall be 1 January 1981 instead of 13 March 1962 and 1 July 1981 instead of 1 February 1963 and 1 January 1967.
3. As regards agreements covered by Article 85 of the Treaty as a result of the accession of Spain and Portugal, Articles 18 and 19 shall apply,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relevant dates shall be 1 January 1986 instead of 13 March 1962 and 1 July 1986 instead of 1 February 1963 and 1 January 1967.

## Article 21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1 April 1993. It shall apply until 31 March 2003.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Done at Brussels, 21 December 1992. For the Commission

Leon BRITTAN

## Ⅲ. 일본 보험업법 관련 조항

### 1. 보험업법 제101조 ~ 105조

第百一条(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の適用除外)

- 1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の規定は、次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て行う次に掲げる行為には、適用しない。ただし、不公正な取引方法を用いるとき、一定の取引分野における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ことにより保険契約者若しくは被保険者の利益を不当に害することとなるとき、又は第百五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公示があった後一月を経過したとき（同条第三項の請求に応じ、内閣総理大臣が第百三条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場合を除く。）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航空保険事業（航空機(ロケット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航空機により運送される貨物を保険の目的とする保険又は航空機の事故により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に関する保険の引受けを行う事業をいい、航空機搭乗中の者の傷害に関する保険の引受けに係る事業を含む。）、原子力保険事業(原子力施設を保険の目的とする保険又は原子力施設の事故により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に関する保険の引受けを行う事業をい

う。)、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の規定に基づく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険事業又は地震保険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一年法律第七十三号)に規定する地震保険契約に関する事業の固有の業務につき損害保険会社が他の損害保険会社(外国損害保険会社等を含む。)と行う共同行為

- 二 前号以外の保険の引受けに係る事業において、危険の分散又は平準化を図るためにあらかじめ損害保険会社と他の損害保険会社(外国損害保険会社等を含む。)との間で共同して再保険することを定めておかねば、保険契約者又は被保険者に著しく不利益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当該再保険契約又は当該再保険に係る保険契約につき次に掲げる行為の全部又は一部に関し損害保険会社が他の損害保険会社(外国損害保険会社等を含む。)と行う共同行為

イ 保険約款の内容(保険料率に係るものを除く。)の決定

ロ 損害査定の方法の決定

ハ 再保険の取引に関する相手方又は数量の決定

ニ 再保険料率及び再保険に関する手数料の決定

- 2 第二百五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共同行為の内容の一部について行われたときは、その共同行為の内容のうちその請求に係る部分以外の部分については、前項ただし書(同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公示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にかかわらず、前項本文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とする。

## 第百二条(共同行為の認可)

- 1 損害保険会社は、前条第一項各号の共同行為を行い、又はその内容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の認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2 内閣総理大臣は、前項の認可の申請に係る共同行為の内容が次の各号に適合すると認めるときでなければ、同項の認可をしてはならない。
  - 一 保険契約者又は被保険者の利益を不当に害さないこと。
  - 二 不当に差別的でないこと。



三 加入及び脱退を不当に制限しないこと。

四 危険の分散又は平準化その他共同行為を行う目的に照らして必要最小限度であること。

#### 第三百条(共同行為の変更命令及び認可の取消し)

内閣総理大臣は、前条第一項の認可に係る共同行為の内容が同条第二項各号に適合するものでなくなったと認めるときは、その損害保険会社に対し、その共同行為の内容を変更すべきことを命じ、又はその認可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四百条(共同行為の廃止の届出)

損害保険会社は、共同行為を廃止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内閣総理大臣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五百条(公正取引委員会との関係)

- 1 内閣総理大臣は、第二条第一項の認可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公正取引委員会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内閣総理大臣は、第三条の規定による処分をしたとき、又は前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受理した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公正取引委員会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公正取引委員会は、第二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共同行為の内容が同条第二項各号に適合するものでなくなったと認めるときは、内閣総理大臣に対し、第三条の規定による処分を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 4 公正取引委員会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したときは、その旨を官報に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시행규칙 관련 조항

(共同行為の認可の申請)

第五十五条 損害保険会社(外国損害保険会社等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は、法第百二条第一項(法第百九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認可を受けようとするときは、次に掲げる事項(共同行為の内容の変更をする場合においては、当該変更の内容)を記載した共同行為の当事者である損害保険会社の連名の認可申請書を金融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共同行為の当事者の商号、名称又は氏名及びその本店、主たる事務所又は日本における主たる店舗(法第百八十七条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日本における主たる店舗をいう。以下同じ。)の所在地並びに当該当事者が法人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代表者又は法第百八十七条第一項第二号の日本における代表者の氏名
- 二 共同行為の名称
- 三 共同行為の態様
- 四 共同行為の開始時期及び期間の定めがある場合には、その開始時期及び期間
- 五 共同行為に関する事務を統括する事務所がある場合には、その事務所の名称及び所在地

2 前項の認可申請書には、次に掲げる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理由書
- 二 共同行為に関する協定書、契約書その他の書面
- 三 その他参考となるべき事項を記載した書類

3 第一項の認可申請書及びその添付書類は、正本一通及びその写し二通を金融庁長官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保険業務等に関する苦情処理措置及び紛争解決措置)

第五十五条の二 法第百五条の二第一項第二号(法第百九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苦情処理措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措置は、次の

各号のいずれかとする。

- 一 次に掲げるすべての措置を講じること。
  - イ 保険業務等関連苦情(法第二条第三十八項 に規定する保険業務等関連苦情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処理に関する業務を公正かつ的確に遂行するに足りる業務運営体制を整備すること。
  - ロ 保険業務等関連苦情の処理に関する業務を公正かつ的確に遂行するための規則(当該業務に関する保険業関係業者(法第二条第四十二項 に規定する保険業関係業者をいう。第四号及び第三項において同じ。)内における責任分担を明確化する規定を含むものに限る。)を整備すること。
  - ハ 保険業務等関連苦情の申出先を顧客(法第一百五条の二第一項第二号 に規定する顧客をいう。)に周知し、並びにイの業務運営体制及びロの規則を公表すること。
- 二 金融商品取引法第七十七条第一項(同法第七十八条の六(投資者からの苦情に対する対応等)及び第七十九条の十二(認定団体による苦情の処理)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投資者からの苦情に対する対応等)の規定により金融商品取引業協会(同法第二条第十三項(定義)に規定する認可金融商品取引業協会又は同法第七十八条第二項(認定金融商品取引業協会の認定)に規定する認定金融商品取引業協会をいう。次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又は認定投資者保護団体(同法第七十九条の十第一項(業務廃止の届出)に規定する認定投資者保護団体をいう。次項第一号において同じ。)が行う苦情の解決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苦情の処理を図ること。
- 三 消費者基本法(昭和四十三年法律第七十八号)第十九条第一項(苦情処理及び紛争解決の促進)又は第二十五条(国民生活センターの役割)に規定するあっせん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苦情の処理を図ること。
- 四 法第三百八条の二第一項 に規定する指定(その紛争解決等業務の種別が当該保険業関係業者が行う保険業務等以外の保険業務等であるものに限る。次項第四号において同じ。)又は令第四十四条の七 各号に掲げる指定を受

けた者が実施する苦情を処理する手続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苦情の処理を図ること。

- 五 保険業務等関連苦情の処理に関する業務を公正かつ的確に遂行するに足りる経理的基礎及び人的構成を有する法人(法第三百八条の二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法人をいう。次項第五号において同じ。)が実施する苦情を処理する手続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苦情の処理を図ること。

- 2 法百五条の二第一項第二号(法百九十九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に規定する紛争解決措置として内閣府令で定める措置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とする。

- 一 金融商品取引業協会又は認定投資者保護団体のあっせん(金融商品取引法第七十七条の二第一項(同法第七十八条の七(認定協会によるあっせん)及び第七十九条の十三(認定団体によるあっせん)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認可協会によるあっせん)に規定するあっせんをいう。)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紛争(法第二条第三十九項に規定する保険業務等関連紛争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解決を図ること。

- 二 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三十三条第一項(会則)に規定する会則若しくは当該会則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規則に規定する機関におけるあっせん又は当該機関における仲裁手続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紛争の解決を図ること。

- 三 消費者基本法第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十五条に規定するあっせん又は同条に規定する合意による解決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紛争の解決を図ること。

- 四 法第三百八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指定又は令第四十四条の七各号に掲げる指定を受けた者が実施する紛争の解決を図る手続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紛争の解決を図ること。

- 五 保険業務等関連紛争の解決に関する業務を公正かつ的確に遂行するに足りる経理的基礎及び人的構成を有する法人が実施する紛争の解決を図る手続

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紛争の解決を図ること。

- 3 前二項(第一項第五号及び前項第五号に限る。)の規定にかかわらず、保険業関係業者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法人が実施する手続により保険業務等関連苦情の処理又は保険業務等関連紛争の解決を図ってはならない。
  - 一 法又は弁護士法 の規定により罰金の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 二 法第三百八条の二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法第三百八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又は令第四十四条の七各号に掲げる指定を取り消され、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法人
  - 三 その業務を行う役員（役員が法人であるときは、その職務を行うべき者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うちに、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ある法人
    - イ 禁錮以上の刑に処せられ、又は法若しくは弁護士法 の規定により刑に処せられ、その執行を終わり、又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った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 ロ 法第三百八条の二十四第一項の規定により法第三百八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指定を取り消された法人において、その取消しの日前一月以内にその法人の役員であった者で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又は令第四十四条の七各号に掲げる指定を取り消された法人において、その取消しの日前一月以内にその法人の役員であった者でその取消しの日から五年を経過しない者



---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 연구보고서(구)

---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의 시사점 / 유경원 · 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구)

---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중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중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량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보험동향</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li> <li>- 영문보고서</li> </ul>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자약력

### 정 호 열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제15대)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E-mail : hoychung@skku.edu)

연구보고서 2017-3

###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발행일	2017년 2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

ISBN 979-11-85691-53-4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